연구보고서 24-07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2024. 12.

권 성 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2024. 12.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 언

조세제도는 한 국가의 재정 운용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그 설계와 운영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선호와 가치가 반영된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정치적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세 요건의 설정과 세율 결정 등 조세제도 설계의 모든 과정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세제 설계와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선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세제 설계와 정책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세부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에서는 재정패널조사와 자체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국민의 세제 인식과 선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제 설계와 개편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속·증여세는 그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재분배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첨예한 분야로, 본 연구는 국민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학문적 기여 역시 크다. 세제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세제 개편은 조세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다른 조세제도에도 폭넓게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권성오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저자는 연구 과정에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세미나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원내외 전문가들과 익명의 외부 심의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격려해 준 동료 박사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아울러 연구 진행과 분석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나영 연구원, 김상현 연구원, 배현경 연구원, 그리고 최종 출판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한 국가의 세제는 가상의 사회계획가(hypothetical social planner)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Persson and Tabellini, 2002).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김진수 · 김정아 · 조진권, 2008),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1]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세법개정안은 행정부에서 준비한 뒤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이 입법 활동이나 여론 형성을 통해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세법을 입안하고 협의하는 주요 의사결정자 중 다수가 선출직인 점은 세제 결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체계를 분석하는 재정학의 최적조세모형에서도 사회 선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aez and Stantcheva, 2016). 예를 들어, 최적조세모형을 통해 상속세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과세 필요성과 적정 과세 수준이 사회 선호에 대한 가정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Farhi and Werning(2013)은 자녀 세대의 기회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uziemko et al., 2015; Almås et al., 2020; Fisman et al., 2020; Singhal, 2021; Stantcheva, 2021).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선호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조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2]을 고려하여, 세제에 대한 일

---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Almås et al.(2020)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간의 세제 및 재분배 정책 차이가 국민

반 국민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Fisman et al.(2020)은 적정 부유세 수준에 대한 선호를 계량화하고, 자산 형성 방식에 따라 부유세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Stantcheva (2021)는 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무작위로 제공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실제 세제와 세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둘째, 세제가 노동 공급, 탈세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셋째, 세목별 및 과세표준 구간별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를 조사한다. 넷째, 경제력, 연령, 정치 성향 등 납세자 인식의 다양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첫째로,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적정 세율 정보를 이용한다. 재정패널조사는 2018년부터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소득세율을 조사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응답자들은 세목별로 구체적인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 비율을 응답하였다. 둘째로,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견해 등 응답자의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상속세에 중점을 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세제의 재분배 효과, 효율 비용,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실제 세부담 정보 제공,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응답 방식(금액 혹은 비율)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실험을 활용하였다.

들의 선호 차이에 기인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저자들은 피험자들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분배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 선호도가 공정성과 효율성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인들은 노르웨이인들보다 더 많은 불평등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국인들은 소득이 운에 의해 결정되든 능력에 의해 결정되든 이를 공정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공정성 관점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의 적정 세부담에 관한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선행연구 중 Stantcheva(2021)와 Kuziemko et al.(2015)는 응답자에게 상속세 부담을 현행 대비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담 수준에 대한 선호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반면, Singhal(2021)과 Fisman et al.(2020)에서는 소득세와 부유세에 대한 적정 세부담을 소득 및 자산 수준별로 수량화하여 응답자의 구체적인 선호를 추정하였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납세순응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오종현, 2024).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설문실험을 이용해 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선호와 세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가 수준 자료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와 저소득층 지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국가일수록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소득 격차 개선에 있어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더 누진적인 소득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응답이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응답자가 인식한 적정 세율이 실제 실효세율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서 응답자가 인식한 적정 세율이 실제 실효세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장에서는 상속세에 중점을 둔 자체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적정 세부담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와 비교하여,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세제에 대한 지식,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 해외 선행연구에서 응답자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Stantcheva, 2021). 적정 세부담에 대

한 선호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부담 변화 여부, 적정 면세점 수준 및 과세대상 비율 등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설문실험을 통해 상속세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실제 세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요인이 응답자의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 실효세율을 유산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는 과대 추정하고,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실제 세부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선호가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작위 실험을 통해 세부담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응답자들의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적정 상속세 체계는 실제 세제에 비해 덜 누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응답자들에 비해 상속세를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tcheva, 2021).[3]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적조세모형에 따르면, 적정 과세 수준은 단순히 사회적 선호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세제로 인한 행태 변화와 능력 분포의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Piketty and Saez, 2013). 또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견해가 조세제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소수의 납세자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선호의 의의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4]

상속·증여세 등 세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첨예한 분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3) 미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활용한 Stantcheva(2021)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1년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0%(전체 피상속인 중 평균 0.26%)가 전체 상속세의 75%를 납부하였다.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세제에 대한 지식, 효율 비용과 재분배 효과, 공정성 인식, 적정 세부담 선호 등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CONTENTS

목 차

Ⅰ. 서론 ····· 17

Ⅱ. 선행연구 및 국제비교 ····· 20

1. 선행연구 ····· 20

가. Fisman et al.(2020) ····· 20

나. Kuziemko et al.(2015) ····· 21

다. Stantcheva(2021) ····· 23

라. Almås et al.(2020) ····· 25

마. Bellani et al.(2024) ····· 27

바. Bastani and Waldenstrom(2021) ····· 28

2. 국가 간 세제 비교 ····· 29

가. 소득세 ····· 29

나. 상속세 ····· 33

3. 국가 간 인식 비교 ····· 38

Ⅲ.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적정 세부담 인식 분석 ····· 44

1. 소득세 ····· 44

2. 상속세 ····· 57

3. 증여세 ····· 63

Ⅳ. 설문실험을 이용한 상속세 인식 및 선호 분석 ····· 70

1. 설문 및 실험 개요 ····· 70

가. 표본 ····· 70

나. 설문 내용 ····· 73

CONTENTS

다. 실험 개요 ····· 76
2. 주요 결과 ····· 80
가. 세제와 자산 분포에 대한 지식 ····· 80
나. 세제로 인한 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 ····· 85
다. 재분배 효과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 89
라.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 ····· 92
3. 이질성 분석 ····· 97
4. 강건성 검증 ····· 102
가. 이탈(attrition) ····· 102
나. 적정 세부담 측정 방법 ····· 104
다. 설문시간 및 응답자 피로 ····· 104
라. 실험자 수요 효과(Experimenter demand effects) ····· 105

Ⅴ. 결론 ····· 107

참고문헌 ····· 110

표목차

〈표 Ⅱ-1〉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 31
〈표 Ⅱ-2〉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 ····· 36

〈표 Ⅲ-1〉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 46
〈표 Ⅲ-2〉 소득 금액별 적정 소득세 비율 ····· 48
〈표 Ⅲ-3〉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의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 ····· 49
〈표 Ⅲ-4〉 소득세 세율체계 선호 유형 ····· 51
〈표 Ⅲ-5〉 적정 소득세 세율체계 ····· 51
〈표 Ⅲ-6〉 재정패널조사와 ISSP 기초통계 ····· 53
〈표 Ⅲ-7〉 적정 소득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 56
〈표 Ⅲ-8〉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 59
〈표 Ⅲ-9〉 상속재산 금액별 적정 상속세 비율 ····· 60
〈표 Ⅲ-10〉 2022년 결정 자료의 상속세 총 상속재산가액 대비 총 결정세액 ····· 61
〈표 Ⅲ-11〉 적정 상속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 62
〈표 Ⅲ-12〉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 65
〈표 Ⅲ-13〉 증여재산 금액별 적정 증여세 비율 ····· 66
〈표 Ⅲ-14〉 2022년 결정 자료의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대비 총 결정세액 ····· 67
〈표 Ⅲ-15〉 적정 증여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 68

〈표 Ⅳ-1〉 표본 특성: 할당 변수 ····· 71
〈표 Ⅳ-2〉 표본 특성: 비할당 변수 ····· 72
〈표 Ⅳ-3〉 상속세 면세점에 대한 지식 ····· 81
〈표 Ⅳ-4〉 상속세 실효세율에 대한 지식 ····· 82
〈표 Ⅳ-5〉 자산분포에 대한 지식 ····· 83

CONTENTS

〈표 Ⅳ-6〉 상속세의 효율 비용 ····· 85
〈표 Ⅳ-7〉 상속세 인상에 따른 행태 반응에 대한 인식 ····· 87
〈표 Ⅳ-8〉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 90
〈표 Ⅳ-9〉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 ····· 93
〈표 Ⅳ-10〉 상속세 적정 세율 ····· 95
〈표 Ⅳ-11〉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정치적 성향에 따른 이질성) ····· 97
〈표 Ⅳ-12〉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자산 수준에 따른 이질성) ····· 98
〈표 Ⅳ-13〉 상속세 적정 세율(정치 성향에 따른 이질성) ····· 99
〈표 Ⅳ-14〉 상속세 적정 세율(자산 수준에 따른 이질성) ····· 101
〈표 Ⅳ-15〉 이탈과 응답자 특징 ····· 103
〈표 Ⅳ-16〉 설문 편향 인식의 요인 ····· 106

그림목차

[그림 Ⅱ-1]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평균소득의 50%) ····· 30
[그림 Ⅱ-2]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평균소득의 250%) ····· 31
[그림 Ⅱ-3] OECD 회원국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적용 구간 ····· 33
[그림 Ⅱ-4] 주요국의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 35
[그림 Ⅱ-5] 자녀에 대한 상속세 세율 ····· 38
[그림 Ⅱ-6] 사회적 규범과 조세제도 ····· 39
[그림 Ⅱ-7] 국가 간 재분배 선호 비교 ····· 41
[그림 Ⅱ-8] 국가 간 정부 신뢰 비교 ····· 42
[그림 Ⅱ-9] 고소득자 세부담과 사회구성원의 인식 ····· 43

[그림 Ⅲ-1]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 45
[그림 Ⅲ-2]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 46
[그림 Ⅲ-3] 적정 소득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 55
[그림 Ⅲ-4] 세전소득 3억원과 3천만원의 적정 소득세율 격차 분포 ····· 57
[그림 Ⅲ-5] 제16차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 58
[그림 Ⅲ-6]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 59
[그림 Ⅲ-7] 적정 상속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 62
[그림 Ⅲ-8] 상속재산 30억원과 3억원의 적정 상속세율 격차 분포 ····· 63
[그림 Ⅲ-9] 제16차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 64
[그림 Ⅲ-10]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 65
[그림 Ⅲ-11] 적정 증여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 68
[그림 Ⅲ-12] 증여재산 5억원과 5천만원의 적정 증여세율 격차 분포 ····· 69

[그림 Ⅳ-1] 유산이 10억원인 경우에 대한 적정 세부담 수준 문항 예시 ····· 76
[그림 Ⅳ-2] G3에게 제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과 퀴즈 ····· 79

Ⅰ. 서론

한 국가의 세제는 가상의 사회계획가(hypothetical social planner)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Persson and Tabellini, 2002).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김진수 · 김정아 · 조진권, 2008),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1]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세법개정안은 행정부에서 준비한 뒤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이 입법 활동이나 여론 형성을 통해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세법을 입안하고 협의하는 주요 의사결정자 중 다수가 선출직인 점은 세제 결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체계를 분석하는 재정학의 최적조세모형에서도 사회 선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aez and Stantcheva, 2016). 예를 들어, 최적조세모형을 통해 상속세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과세 필요성과 적정 과세 수준이 사회 선호에 대한 가정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Farhi and Werning(2013)은 자녀 세대의 기회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uziemko et al., 2015; Almås et al., 2020; Fisman et al., 2020; Singhal, 2021; Stantcheva, 2021).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선호가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 조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2]을 고려하여, 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Fisman et al.(2020)은 적정 부유세 수준에 대한 선호를 계량화하고, 자산 형성 방식에 따라 부유세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Stantcheva (2021)는 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무작위로 제공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실제 세제와 세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둘째, 세제가 노동 공급, 탈세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셋째, 세목별 및 과세표준 구간별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를 조사한다. 넷째, 경제력, 연령, 정치성향 등 납세자 인식의 다양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첫째로,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적정 세율 정보를 이용한다. 재정패널조사는 2018년부터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소득세율을 조사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응답자들은 세목별로 구체적인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 비율을 응답하였다. 둘째로,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견해 등 응답자의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결정 요인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상속세에 중점을 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세제의 재분배 효과, 효율 비용,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실제

2) Almås et al.(2020)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간의 세제 및 재분배 정책 차이가 국민들의 선호 차이에 기인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저자들은 피험자들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분배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 선호도가 공정성과 효율성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인들은 노르웨이인들보다 더 많은 불평등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국인들은 소득이 운에 의해 결정되든 능력에 의해 결정되든 이를 공정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공정성 관점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세부담 정보 제공,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응답 방식(금액 혹은 비율)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실험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의 적정 세부담에 관한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선행연구 중 Stantcheva(2021)와 Kuziemko et al.(2015)는 응답자에게 상속세 부담을 현행 대비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담 수준에 대한 선호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반면, Singhal(2021)과 Fisman et al.(2020)에서는 소득세와 부유세에 대한 적정 세부담을 소득 및 자산 수준별로 수량화하여 응답자의 구체적인 선호를 추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납세순응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오종현, 2024).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납세자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세제를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세제에 대한 인식과 재분배 선호를 분석한다. 이어서 제Ⅳ장에서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에 대한 인식과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 및 국제비교

1.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설문실험 등을 이용하여 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가 인식하는 적정 세부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Singhal(2021)과 Fisman et al.(2020) 등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상속·증여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아울러, 적정 세부담을 답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문헌에 측정 방법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가. Fisman et al.(2020)

Fisman et al.(2020)은 소득과 부(wealth)를 함께 고려하여 세부담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다.[3] 저자들은 소득과 부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소득과 부의 조합을 제시한 뒤, 각 조합에 대한 적정 세부담을 질문하였다. 특정 자산 규모에 대해 보유세 세율만을 묻는 경우, 응답자가 양(+)의 세율을 답해야 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Amazon's Mechanical Turk와 Understanding America Study에서 수집된 설문 및 실험 자료다. 응답자들은 약 10개의 가상 소득 및 부 조합에 대해 적정 세부담 금액을 제시

3) Singhal(2021)은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에서 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적정 소득세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계량화한 지표를 구축하였다. 응답자들은 특정 소득 수준을 버는 개인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했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선호 세율은 전통적인 범주형 재분배 선호 지표 및 투표 행동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도록 요청받았다, 예를 들어 "20XX년 말 보유한 자산이 $X이고 그해 소득이 $Y인 경우, 해당 연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무작위로 구분되어 부의 형성 과정에 대해 저축을 통해 축적된 부("저축" 처치집단) 혹은 상속을 통해 축적된 부("상속" 처치집단)라는 설명을 제공받았다. 각 처치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해당 집단의 질문에 응답한 이후, 다른 처치집단의 질문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하였다. 이를 통해 부의 형성 과정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개인 고정효과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소득보다 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선호하였다. 즉, 응답자들이 저량과 유량(stock and flow)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13~15%의 선형적 소득세율 체계를 선호하였으며, 1.2%의 부유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으로 형성된 부에 대해서는 0.8%의 세율을, 상속으로 형성된 부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Kuziemko et al.(2015)

Kuziemko et al.(2015)에서는 불평등과 세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4] 분석 자료는 Amazon의 Mechanical Turk 플랫폼을 통해 미국인의 경제적 불평등, 세금, 재분배 정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제1차 설문조사와 실험이 수행되었다. 설문 내용은 정치 성향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 무작위로 제공된 불평등과 조세 정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불평등, 조세 및 재분배 정책 및 정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제1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3월에

4) 일반적인 중위 투표자 모델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증가해야 하지만,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소득 집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분배 수요가 더 커졌다는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저자들은 사람들이 불평등의 심화 정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정보 제공 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는 약 6,000명을 대상으로 후속 조사가 실시되었다.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된 세제에 대한 견해는 상위 1%에 대한 적정 소득세율, 백만장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필요성, 상속세 인상 여부, 그리고 상원의원에게 상속세 강화를 위한 탄원서 제출 의향 등이다.

제1차 무작위 실험의 목표는 불평등과 조세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처치집단에는 현실을 단순화하면서 다소 편향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응답자에게 본인의 소득을 기입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국 소득분포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 분포와 과거 소득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조세 정책 정보는 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 항상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 ② 상속세가 전체 인구의 0.1%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35% 이상 증가했고, 이는 진보와 보수 간 의견 차이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또한 상속세 강화를 지지하는 응답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 달 후 같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조사에서도 이 효과가 유지됨이 확인되었다.[5)]

제2차 무작위 실험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상속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재분배 정책에 비해 컸던 이유를 분석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상속세 대상 비율을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정확히 알릴 경우 정답률이 크게 높아졌다. 예를 들어, 상속세 부과 비율에 대한 질문에서 통제집단의 12%만이 정확한 답을 선택했지만, 처치집단에서는 정답률이 3배 증가했다.[6)] 상속세 인식에 미치는 정보 효과는 다소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7)] 상속세가 0.1%의 상위 계층에만 적용된다는 사실만 제공했을

5) 그러나 최고 소득세율, 최저임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식품 지원(food stamps) 등 다른 재분배 정책의 경우 정보 제공이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응답자가 생각하는 상속세 부과 비율을 '1% 이하, 1%, 10%, 20%, 40%, 60%, 100%'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통제집단의 12%가 정답(1% 이하)을 선택하였다.

때도 여전히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다른 재분배 정책에 대한 견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단절성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정부 신뢰'와 관련된 문구를 추가해 정부 신뢰도가 낮아지면 재분배 정책 지지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재분배 정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경우 정책 지지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8)]

다. Stantcheva(2021)

Stantcheva(2021)는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세제 선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조세의 재분배 효과와 행태 반응에 따른 효율 비용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며, 이러한 인식이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더 나아가 세제 선호와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무작위 실험을 통해 조세의 효과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세제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미국 내 18~70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다.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설문이 분리되어 진행되었으며, 소득세 관련 질문에 2,780명이, 상속세 관련 질문에 2,380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적 성향, 소득 및 부의 분배 인식, 정부에 대한 견해, 사회적 선호, 조세 이해 수준과 선호, 그리고 조세의 재분배 효과와 효율 비용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했다. 정책 견해에 대한 지표는 누진적인 세제를 지지하는 정도와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에 호의적인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들을 표준화한 후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9)]

---

7) 응답자의 소득 분포상의 위치에 대한 정보, 대저택 사진과 함께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고한다는 정보를 제거하였다.

8) 예컨대, 식료품 할인 구매권 제도(food stamps)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정 등 많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며, 식비 지출을 돕기 위해 한 사람당 월 150달러를 준다는 설명 등을 제공하였다.

무작위 실험은 조세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외생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실험군에 속한 피험자는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교육 영상 중 한 가지를 시청했다. 실험군은 세 가지 집단으로 나뉘어 재분배 효과에 관한 영상(Redistribution), 효율 비용에 관한 영상(Efficiency), 두 영상 모두를 시청하는 집단(Economist)으로 나뉘었다. 각 영상은 5분 이내의 기초적인 교육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실증적 증거 없이 이론적 내용을 다루었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재분배 영상에서는 조세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완화 가능성을, 효율 비용 영상에서는 조세가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10]

조세 정책에 대한 견해를 분석한 기초통계 결과,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현재 조세제도를 인식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며, 이는 "현실의 양극화(polarization of reality)" 현상을 반영한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보수 성향 응답자들보다 실제 세금이 더 낮고 덜 누진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화당 지지자들은 소득세가 기업가 정신과 노동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인식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소득세 변화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속세의 경우,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부유층이 상속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세 정책의

9)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인 소득세가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소득층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위하여 고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는지,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활용하여 지표를 구축하였고,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상속세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현재 수준에 비하여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부가 부의 대물림을 감소시키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활용하여 지표를 구축하였다.

10) 구체적으로, 소득세 재분배 영상에서는 미국의 상위/하위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누진적인 소득세를 이용한 재분배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함(a good thing)을 설명하였다. 상속세 재분배 영상에서는 미국의 상위/하위 계층의 자산이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속세 수입을 이용한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소득세 효율성 영상에서는 소득세 증가는 노동 공급 감소, 탈세 및 거주지 이전 등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상속세 효율성 영상에서는 상속세 증가는 부모 세대의 노동 공급 및 사업 활동 감소, 탈세 등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자녀 세대의 경우 오히려 노동 공급이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경제 전반적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경제 전반보다는 사회적 선호, 정부관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소득세와 상속세 인하가 낙수효과 및 래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제에 대한 견해의 당파적 차이는 조세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규범적 준거(normative criteria), 사회적 선호, 정부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위 정보 제공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분배 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청한 경우 응답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중요한 이슈라고 여기고, 자산 분포의 불균형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한편, 효율 비용 설명을 시청한 응답자들은 조세가 행태 변화와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세와 상속세 모두 재분배 효과를 설명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은 누진적 세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효율 비용만을 설명한 영상을 시청한 집단에서는 세제에 대한 지지 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재분배 효과 설명이 세제 견해에 미치는 영향은 당파적 견해 차이와 비교해 소득세의 경우 약 23%, 상속세의 경우 약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효율 비용에 대한 설명을 시청한 집단은 세제가 행태 왜곡과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했으나, 이러한 인식 변화는 세제에 대한 최종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Almås et al.(2020)

Almås et al.(2020)에서는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노르웨이의 소득 불평등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차이가 각국 국민의 사회적 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11] 저자들은 두 국가 간 정책적

11)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낮고,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며, 높은 세율과 포괄적 복지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러한 정책적 특징은 '치열한 자본주의(cutthroat capitalism)'로 표현되는 미국의 경제구조와 대비된다. 미국은 보다 개방

차이를 통해 도출되는 경제적 격차가 단순히 제도적 구조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국 국민의 사회적 태도나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인과 노르웨이 국민이 공정성(fairness)과 효율성(efficiency)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각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수용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Almås et al.(2020)은 미국과 노르웨이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선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된 실험을 설계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소득을 받는 '노동자'와 그 소득을 재분배할지 결정하는 '관찰자'로 역할을 구분하였는데, 노동자 약 5천명은 아마존의 Mechanical Turk 플랫폼을 통해 모집되어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고 소득을 분배받았고, 관찰자 1천명은 미국과 노르웨이의 대표 표본에서 각각 모집되어 노동자의 소득을 재분배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미국과 노르웨이의 시민이 동일한 경제적 조건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소득을 할당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운(luck)' 조건에서는 노동자의 소득이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배분되었다.[12] 둘째, '능력(merit)' 조건에서는 노동자의 소득이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었다.[13] 셋째, '효율성(efficiency)' 조건에서는 노동자의 소득이 다시 무작위로 결정되지만, 관찰자가 소득을 재분배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총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미국인들은 노르웨이인들보다 더 많은 불평등을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노르

적인 시장 경제와 낮은 복지 수준을 지향하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대조는 공공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따뜻한 사회주의(cuddly socialism)'와 '치열한 자본주의'로 불리며, 각국의 경제 정책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12) 두 노동자 중 한 명이 무작위로 선택되어 6달러를 받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는 방식이다. 이 조건에서는 관찰자가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재분배 결정이 자유롭다.

13)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 노동자는 6달러를, 낮은 생산성을 보인 노동자는 소득을 얻지 못하는 구조이다. 관찰자는 이 조건에서도 비용 없이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

웨이 국민의 사회적 선호 차이가 각 국가의 소득 분포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불평등 수용에 있어 공정성이 효율성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미국과 노르웨이 모두에서 능력에 따른 소득 분배가 운에 따른 소득 분배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여겨지며, 따라서 능력에 기반한 불평등은 더 쉽게 수용된다. 재분배로 인한 비용은 불평등 수용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사람들이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경제적 효율성의 손실보다 더 중시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정성에 대한 관점에서 미국인과 노르웨이인 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운이든 능력이든 결정 요인에 상관없이 공정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적(libertarian) 공정성 관점이 더 우세한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평등주의적(egalitarian) 관점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넷째, 정치적 성향, 사회적 배경, 성별이 개인의 사회적 선호도와 불평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과 노르웨이 모두에서 불평등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배경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고학력자들이 더 많은 불평등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고학력자가 자신의 성공을 능력으로 이뤘다는 인식이 공정성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 나라에서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불평등을 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 Bellani et al.(2024)

Bellani et al.(2024)에서는 독일 대중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상속세 공제액 및 상속 자산 관련 정보 제공의 영향을 조사했다. 저자들은 독일 인구를 대표하는 6,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집단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이 본인의 상속세 대상 가능성 인식과 상속세 폐지 또는 상속세율 인상에 대한 견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험군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집단에는 상속세 공제한도 금액을 안내했고, 두 번째 집단에는 상속 자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부의 대물림 현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세 번째

집단은 두 가지 정보를 모두 받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상속세 공제액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약 80%가 공제액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상속세 공제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대중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공제액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응답자들은 상속세 폐지에 대한 지지를 평균 6%포인트 낮췄고, 상속세율 인상에 대한 지지를 4%포인트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상속세 관련 정보의 정확성이 상속세 정책에 대한 대중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속세 공제 정보 제공의 효과는 저소득층 응답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상속 자산을 기대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정책의 영향을 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따라 판단하는 이른바 '주머니 사정'이 정책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한편, 상속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정보는 대중의 상속세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보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 Bastani and Waldenstrom(2021)

Bastani and Waldenstrom(2021)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에서 대중의 상속세 인식이 상속재산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험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1만 2천여 명의 스웨덴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의 재도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했다. 응답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어 스웨덴 가계 자산의 절반이 상속되었다는 정보, 상속재산 분포의 불평등성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실험 결과, 상속재산의 중요성을 설명 받은 응답자들은 상속세 도입에 대한 지지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는 상속재산의 분포가 불균등하며, 경제적 성공이 개인의 노력보다는 상속과 같은 '운'에 달려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보 제공 효과는 개인의 소득, 재산, 연령,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재산 정보 제공 이후 상속세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상속세 면세 한도가 높은 경우에는 면세 한도가 낮은 경우보다 정보 제공 효과가 미미했다. 이는 상속세 지지 여부가 개인의 재정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상속재산의 비중에 대한 정보가 대중의 상속세 지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국가 간 세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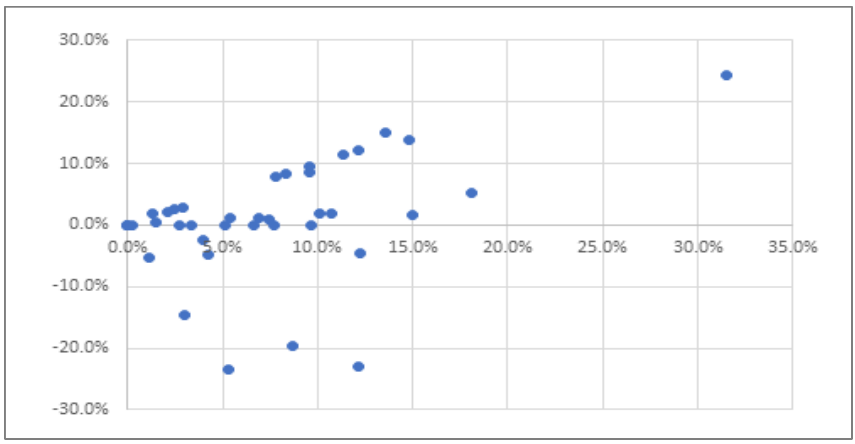
가. 소득세

본 절에서는 매년 OECD에서 발간하는 Taxing Wages 자료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의 소득세제를 비교한다. 과세체계, 납세의무자, 공제제도, 세율구조 등 세제의 다양한 특성을 모두 비교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특정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을 반영한 실효세율을 비교한다. OECD.Stat는 단독가구, 자녀가 없는 홑벌이 부부, 자녀가 2명인 홑벌이 부부 등의 가구 유형을 구분하여 각 국가 평균소득의 50%에서 250% 구간에 대한 실효세율을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국가 평균소득의 50%와 2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단독가구와 자녀가 2명인 홑벌이 부부의 실효세율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국가 평균 소득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의 세부담을 살펴본다. 단독가구의 실효세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5% 미만으로 나타난다. 예외적으로 헝가리와 아이슬란드의 실효세율은 각각 15%와 18.1%로 나타났으며, 덴마크는 31.5%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1.5%로, 칠레(0.0%), 콜롬비아(0.0%), 코스타리카(0.0%), 스페인(0.2%), 폴란드(1.1%), 그리스(1.3%)

에 이어 낮은 편에 속한다. 자녀가 2명인 홑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단독가구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난다. 미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는 저소득 2자녀 홑벌이 부부의 실효세율이 음수인데, 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저소득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조세지출 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덴마크는 실효세율이 24.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뉴질랜드(14.9%), 호주(13.9%), 노르웨이(12.2%)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0.4%로,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림 II-1]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평균소득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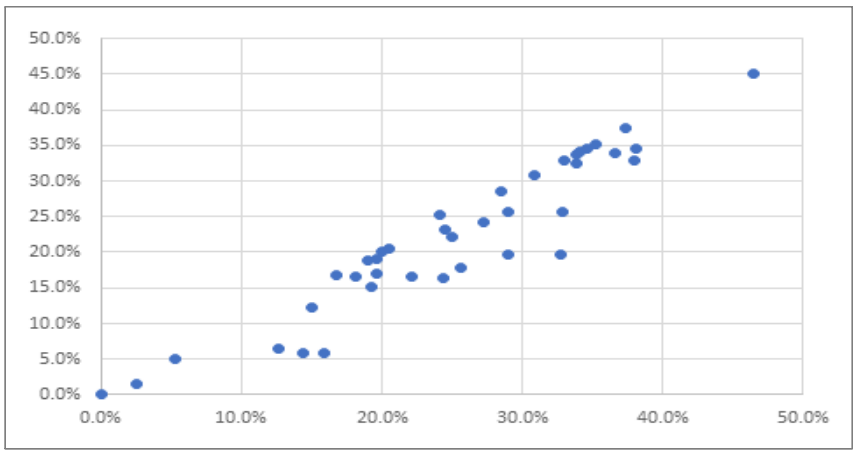
주: x축은 단독가구의 평균 세율, y축은 홑벌이 2자녀 부부의 평균 세율

자료: OECD.Stat, Taxing Wages, country and comparative table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를 이용하여 작성(검색일자: 2024. 10. 14.)

국가 평균 소득의 250%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의 실효세율은 저소득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고소득 가구(평균 소득의 250%)와 저소득 가구(평균 소득의 50%) 간 실효세율 차이가 단독 가구와 2자녀 홑벌이 부부 모두에서 31.2%에 달한다. 고소득 단독 가구의 실효세율은 26개국에서 20% 이상이며, 덴마크가 46.5%로 가장 높다. 한국은 18.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2자녀 홑벌이 부부의 실효세율은 단

독가구와 동일한 국가가 12개국에 달하며, 실효세율 차이가 2%포인트 미만인 국가는 9개국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자녀 홑벌이 가구의 실효세율(19.6%)이 단독가구의 실효세율(32.7%)보다 현저히 낮다.

[그림 Ⅱ-2]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평균소득의 250%)



주: x축은 단독가구의 평균 세율, y축은 홑벌이 2자녀 부부의 평균 세율

자료: OECD.Stat, Taxing Wages, country and comparative table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를 이용하여 작성(검색일자: 2024. 10. 14.)

〈표 Ⅱ-1〉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단위: %)

	50%, single person, 0 children	50%, one-earner married couple, 2 children	250%, single person, 0 children	250%, one-earner married couple, 2 children
Australia	14.8	13.9	35.2	35.2
Austria	4.2	-4.8	29.0	25.7
Belgium	12.2	-4.5	37.9	32.9
Canada	10.7	1.9	33.9	32.6
Chile	0.0	0.0	2.5	1.5
Colombia	0.0	0.0	0.0	0.0
Costa Rica	0.0	0.0	5.2	5.0
Czech Republic	3.0	-14.6	12.6	6.4
Denmark	31.5	24.2	46.5	45.0

〈표 II-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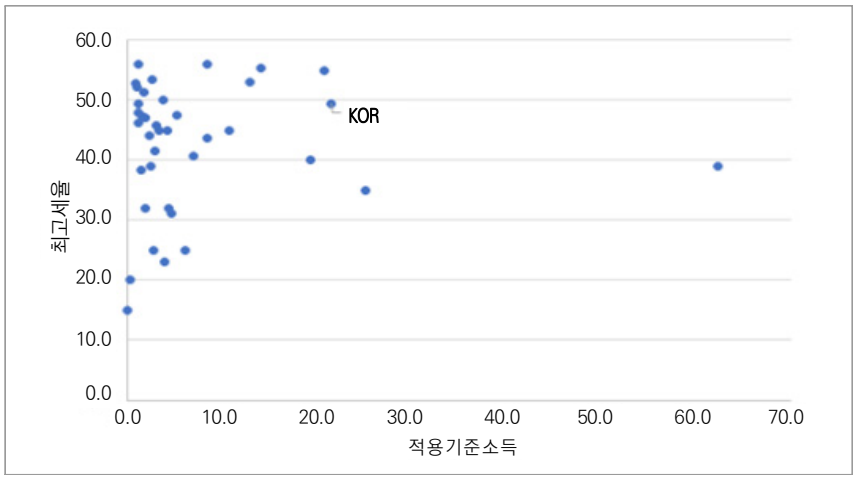
(단위: %)

	50%, single person, 0 children	50%, one-earner married couple, 2 children	250%, single person, 0 children	250%, one-earner married couple, 2 children
Estonia	5.1	0.0	19.7	19.0
Finland	7.8	7.8	34.6	34.6
France	9.5	9.5	25.6	17.8
Germany	8.7	-19.5	32.7	19.6
Greece	1.3	2.0	24.1	25.3
Hungary	15.0	1.6	15.0	12.3
Iceland	18.1	5.2	36.6	34.0
Ireland	10.1	2.0	38.1	34.6
Israel	3.4	0.0	24.5	23.2
Italy	6.7	0.0	33.8	33.7
Japan	5.4	1.2	18.9	18.9
Korea	1.5	0.4	18.1	16.7
Latvia	7.7	0.0	19.6	17.0
Lithuania	8.4	8.4	20.0	20.0
Luxembourg	4.0	-2.4	32.9	25.7
Mexico	2.5	2.5	16.8	16.8
Netherlands	2.9	2.9	34.1	34.1
New Zealand	13.6	14.9	28.5	28.5
Norway	12.2	12.2	30.9	30.9
Poland	1.1	-5.2	14.4	5.8
Portugal	9.6	0.0	29.0	19.8
Slovak Republic	5.3	-23.4	15.9	5.9
Slovenia	2.7	0.0	19.2	15.1
Spain	0.2	0.0	27.3	24.1
Sweden	11.3	11.3	37.4	37.4
Switzerland	6.9	1.2	22.1	16.6
Türkiye	2.1	2.1	20.5	20.5
United Kingdom	9.6	8.5	33.0	33.0
United States	12.2	-23.0	24.4	16.3
OECD Average	7.4	1.0	25.0	22.1

자료: OECD.Stat, Taxing Wages, country and comparative table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를 이용하여 작성(검색일자: 2024. 10. 14.)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들과 G7 국가들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권성준 · 김정환, 2023).[14] 그러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근로자 평균 소득의 21.6배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30개국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평균 소득의 10배 미만이다.

[그림 II-3] OECD 회원국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적용 구간



주: 적용기준 소득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의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비율
자료: 권성준 · 김정환(2023), p. 33.

나. 상속세[15]

상속세는 국가마다 과세 체계가 크게 달라 실효세율 등 단일한 지표만으로 세부담을 비교하기 어렵다. 본 절에서는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 여부, 과세 방식, 배우자 공제 등을 포함하여 국가 간 세제 비교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본다.

14) OECD 회원국 중에 11번째로 높다(권성준 · 김정환, 2023).
15) 본 소절의 내용은 OECD(202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1)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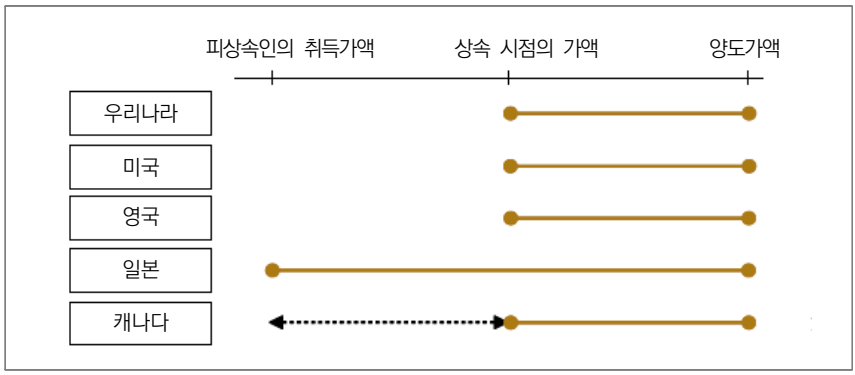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총 24개국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많은 국가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누적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가 없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무상이전 이후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아닌 무상이전 시점의 시장가치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step-up basis)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는 과세이연 방식(carry-over basis)을 적용한다. 덴마크와 헝가리는 상속 시 자산의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데, 덴마크에서는 미술품, 보석류, 차량 및 생활용품을, 헝가리에서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 중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 즉,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승계(carry-over)되는 방식이다. 한편, 캐나다는 상속을 자산 처분으로 간주하여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 시점의 자산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설정한다. 반면,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을 택한다. 캐나다는 상속을 처분으로 간주하여 상속 시점까지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며, 이후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의 자산 가치로 대체된다.

[그림 Ⅱ-4] 주요국의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자료: 신상화(2019)의 [그림 Ⅳ-2]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전에 누적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큰 세부담을 초래하는지는 구체적인 세제와 자산 이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실현 자본이득에 과세할 때 세부담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2) 과세방식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 2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의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는 상속인이 이전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본은 유산세 방식의 특성이 가미된 변형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총 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산출한 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면세점과 세율체계가 동일하더라도,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최고세율(55%)이 한국(50%)보다 높지만,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이 나누어져

실제 세부담은 더 낮을 수 있다. 정확한 세부담은 유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공제제도와 세율체계

상속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서 배우자에게는 한도 없이 면제되거나 가장 높은 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3개 국가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독일, 한국, 네덜란드에서는 배우자의 경우 가장 높은 상속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벨기에,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 높은 상속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리투아니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은 미국에서 1,160만달러, 이탈리아에서 110만달러로 가장 높으며, 반면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 3만달러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표 II-2〉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

(단위: 달러)

	배우자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	자녀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	자녀에 대한 최고세율
리투아니아	전액	전액	–
스위스	전액	전액	–
슬로베니아	전액	전액	–
포르투갈	전액	전액	–
폴란드	전액	전액	–
헝가리	전액	전액	–
미국	전액	11,580,000	40%
영국	전액	641,026	40%
아일랜드	전액	382,636	33%
일본	전액	337,159[1)]	55%

〈표 II-2〉의 계속

(단위: 달러)

	배우자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	자녀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	자녀에 대한 최고세율
프랑스	전액	114,220	45%
덴마크	전액	46,147	15%
한국	2,541,778	423,630[2)]	50%
이탈리아	1,142,197	1,142,197	4%
네덜란드	755,367[3)]	23,924	19%
독일	571,098[4)]	456,879	30%
그리스	171,329	171,329	10%
핀란드	126,065	22,844	20%
칠레	36,952	36,952	25%
스페인	18,226	18,226[5)]	34%
벨기에	17,133	17,133	30%

주: 1)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세금 면제 한도는 3,000만엔 + (600만엔×법적 상속인 수)

2)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5억원의 기초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를 가정함. 대체 항목별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직계비속,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 추가공제, 주택공제 등으로 구성됨

3) 상속받은 연금 자산은 배우자 공제 기준에 포함됨

4)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한도는 최대 EUR 256,000이며, 자녀의 경우 최대 EUR 52,000(연령에 따라 다름). 그러나 추가 공제는 유족연금의 순 현재 가치만큼 감소함

5) 많은 지역에서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하므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제 기준은 하한값으로 간주해야 함

1. 공제 기준은 2020년 기준 USD로 계산되었으며, 수혜자가 장애가 없는 성인으로 가정함

자료: OECD(2021), p. 88, Table 3.5., p. 95, Figure 3.12.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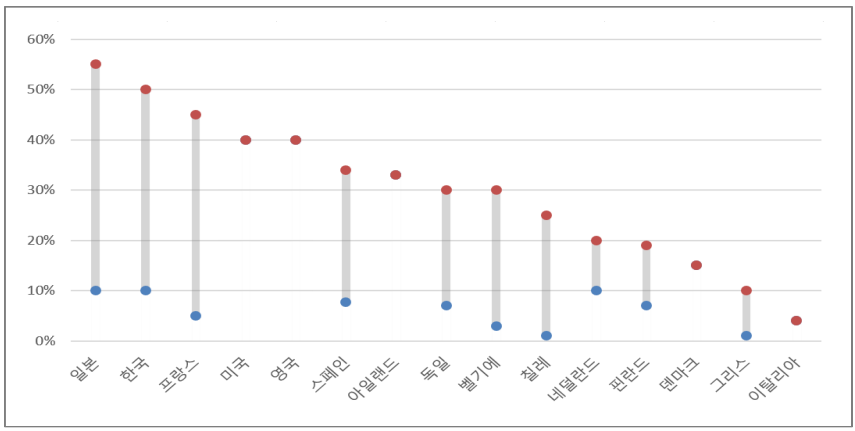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최저 세율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의 세율체계를 적용한다.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되는 국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리투아니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등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이 이에 해당한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저 세율은 칠레와 그리스에서 1%로 가장 낮고, 일본, 한국, 네덜란드에서는 10%로 나

타난다. 반면, 최고 세율은 그리스에서 10%인 반면, 일본에서는 55%로 가장 높다.

미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상속재산의 크기와 무관하게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의 세율을 적용하며, 덴마크는 15%에서 36.25%, 이탈리아는 4%에서 8%, 아일랜드는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차별화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림 II-5] 자녀에 대한 상속세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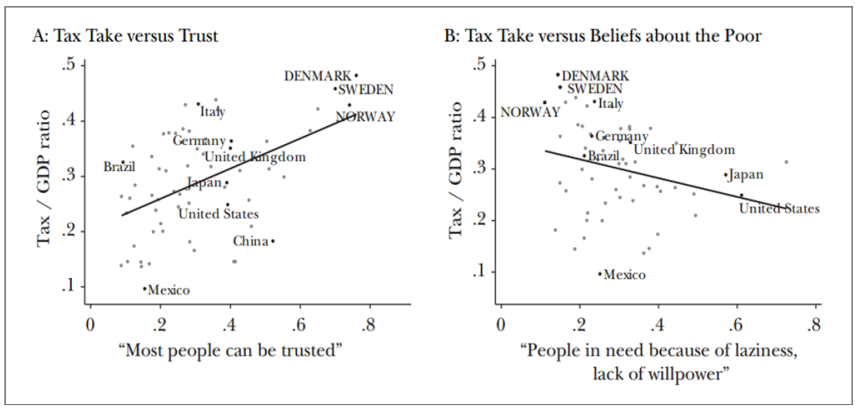
자료: OECD(2021)의 Figure 3.12를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3. 국가 간 인식 비교

Kleven(2014)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 제3자 정보 보고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 탈세율을 효과적으로 낮춘 점, 둘째, 폭넓은 세원과 제한된 공제·면세 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기회를 최소화한 점, 셋째,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등 노동 공급을 촉진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이 이를 가능케 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높은 사회적 규범이 세금 준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국가 수준의 실증 자료를 통해 이들 국가가 높은 수준의 사회 자본과 신뢰를 기반으로 높은 세부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었다.

[그림 II-6] 사회적 규범과 조세제도



자료: Kleven(2014), p. 95.

Stantcheva(2021)의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개인이 생각하는 상위 계층에 대한 적정 세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선호가 강할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정하다고 여긴다. 또한,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클수록 상위 계층에 대한 세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력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세금 정책의 효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길수록, 상위 계층에 대해 부과해야 할 적정 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World Values Survey(WVS)를 이용하여 이러한 요소들의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고 Kleven(2014)의 분석을 확장하여 세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WVS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치관, 신념, 사회적 · 정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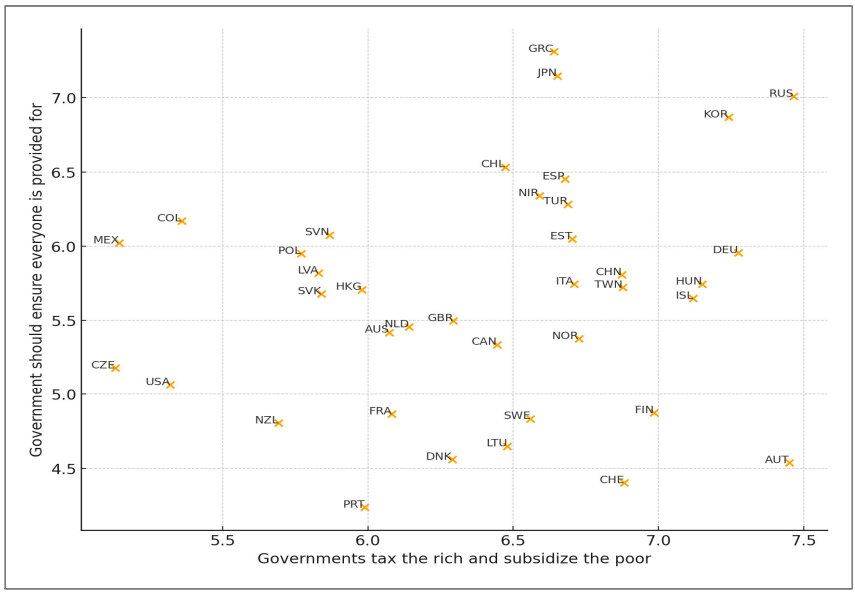
변화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국제 연구 설문조사다. WVS는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위해 1981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100개국에서 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제5차, 6차, 7차 조사는 각각 2005~2009년, 2010~2014년, 2017~2022년에 수행되었다.[16)]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한다. 이때 응답 수치가 클수록, 부자 과세와 빈자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WVS에서 재분배 선호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문항으로 "(개인보다는) 정부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이 있다. 그러나 이 문항은 빈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제보다는 복지 목적의 재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한 척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두 지표 모두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재분배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두 지표의 국가별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 외에 그리스, 일본, 독일, 스페인에서 재분배 선호가 강한 반면, 미국, 포르투갈, 뉴질랜드 등에서는 재분배 선호도가 낮았다. 한편,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정부의 기본생활 보장을 중요시하면서도 부자 과세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호주는 부자 과세와 빈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했지만, 최소한의 생활 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16) 본 절에서는 충분한 관측치수를 확보하기 위해 WVS 5차, 6차, 7차 조사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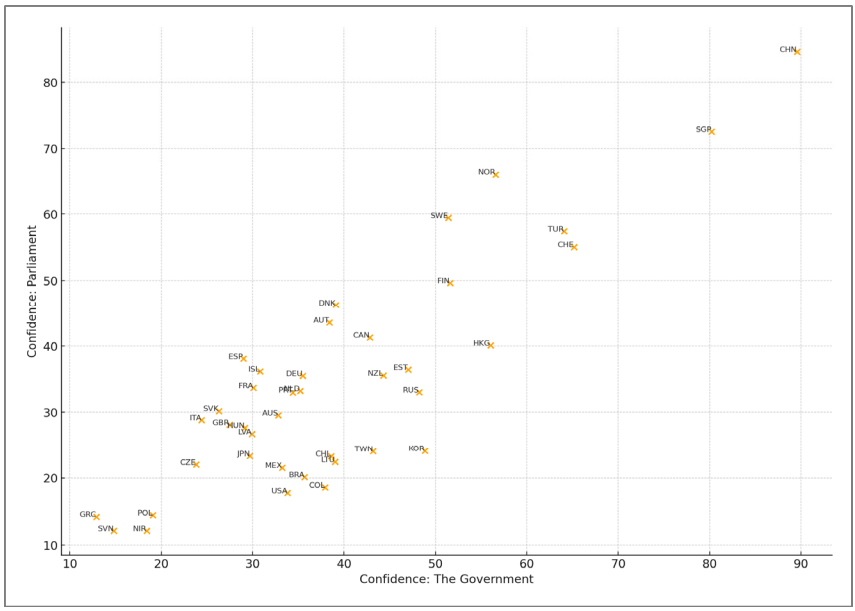
[그림 II-7] 국가 간 재분배 선호 비교



자료: World Value Survey 5차, 6차,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Kuziemko et al.(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 선호의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다. 예를 들어, 경제력 격차 완화에 대한 선호가 강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는 낮을 수 있다. WVS에서는 정부, 금융기관, 사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조사하는데, 본 절에서는 정부와 국회 신뢰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을 비교한다. 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의회에 대한 신뢰 비율 또한 높은 경향이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로는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반대로 신뢰가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등이 있다. 한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국회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이다.

[그림 II-8] 국가 간 정부 신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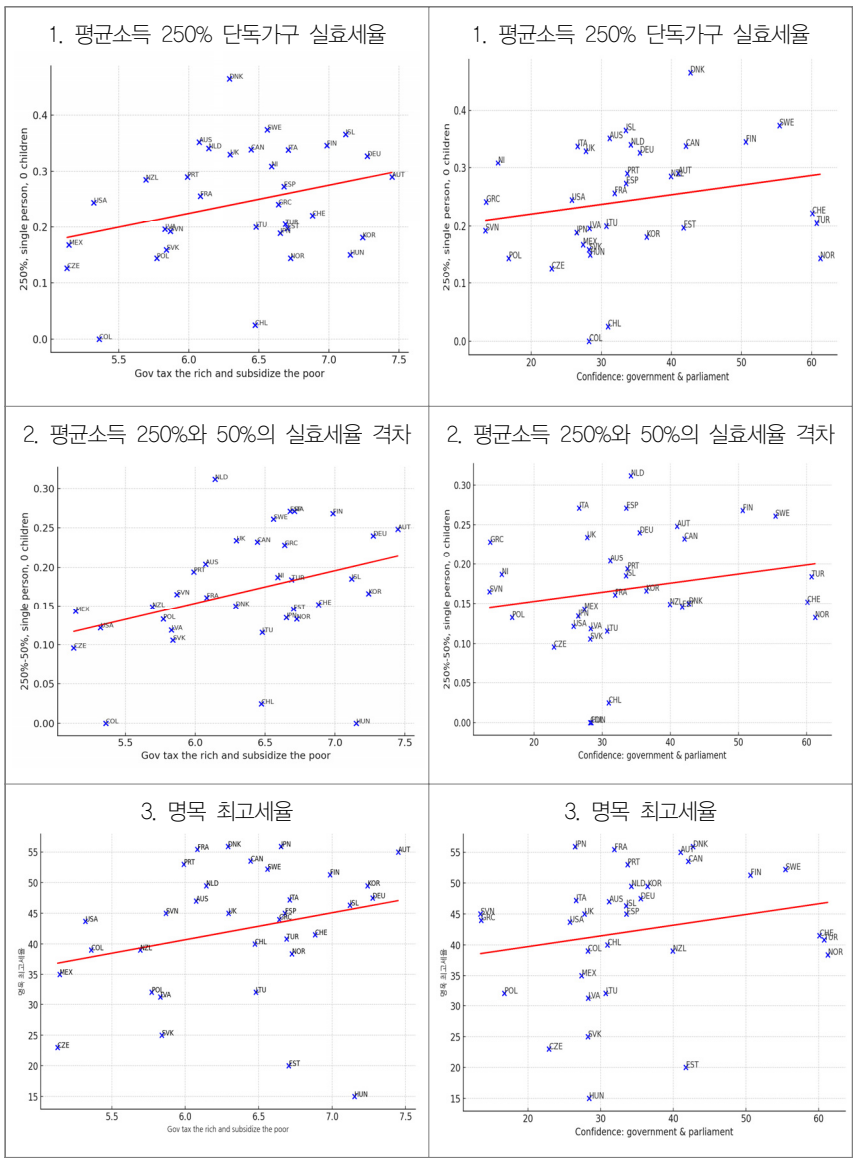


자료: World Value Survey 5차, 6차,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자에 대한 과세와 빈자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국가일수록,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평균소득의 250%에 해당하는 단독가구의 실효세율, 평균소득의 250%와 50%에 해당하는 단독가구 간 실효세율 격차, 명목 최고세율을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지표에서 재분배 선호와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 비율이 높을수록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국가 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상관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예컨대, Kleven(20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선호가 정치 과정을 통해 세제에 반영되는 동시에 세제가 국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Ⅱ-9] 고소득자 세부담과 사회구성원의 인식

〈재분배 선호〉 〈정부 및 의회 신뢰〉



자료: World Value Survey 5차, 6차,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Ⅲ.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적정 세부담 인식 분석

1. 소득세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제11차년도(2018년) 조사부터 개인 소득에 대한 적정 소득세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연간 총 세전 소득이 특정 수준일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소득세 비율은 몇 %입니까?" 응답자가 적정 소득세 비율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제외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만을 고려하도록 추가로 설명하였다. 문항에서 '연간 총 세전 소득'이라고 제시되어, 응답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도 염두에 두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Fisman et al.(2020)에서는 설문에서 '소득(income)'이라고 한 경우와 '근로소득(labor income)'이라고 한 경우 세부담 선호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바 있다.

조사 대상 소득 수준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총 9개이며, 각각에 대해 적정한 소득세 비율을 묻는다.[17] 응답자는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을 8개의 구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 가능한 구간은 '0%',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그리고 '60% 초과'이다.

17)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그림 Ⅲ-1]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b4. 개인의 연간 총 세전소득이 다음의 각 경우와 같을 때, 귀하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몇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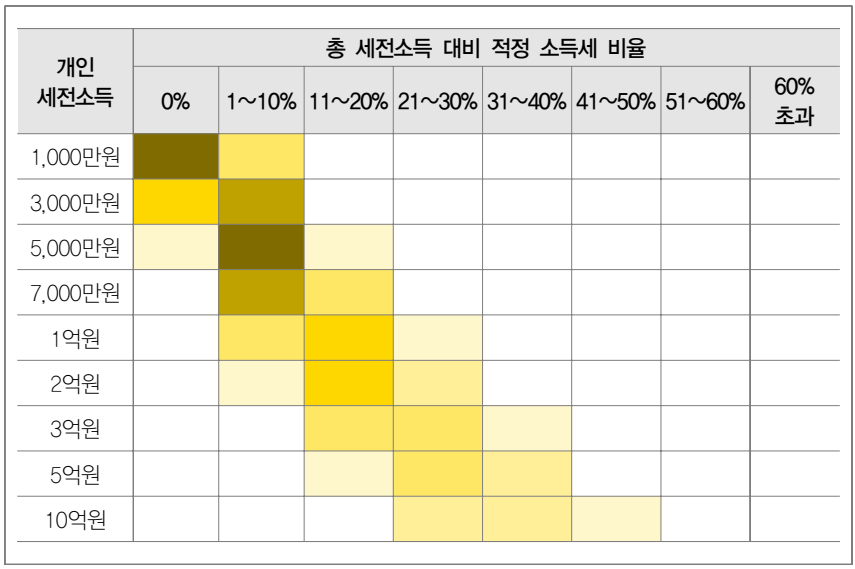
개인 세전소득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							
	① 0%	② 1~10%	③ 11~20%	④ 21~30%	⑤ 31~40%	⑥ 41~50%	⑦ 51~60%	⑧ 60% 초과
1) 1,000만원 p12gb151								
2) 3,000만원 p12gb152								
3) 5,000만원 p12gb153								
4) 7,000만원 p12gb154								
5) 1억원 p12gb155								
6) 2억원 p12gb156								
7) 3억원 p12gb157								
8) 5억원 p12gb158								
9) 10억원 p12gb159								

* 소득세 비율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는 제외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비율만 생각하여 응답해주십시오.

자료: 제15차 재정패널조사 기준

2022년에 실시된 15차년도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 응답 결과를 검토하였다. 2022년 조사에서 총 14,529명이 해당 문항에 응답했으며,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여성 비율은 50.8%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여성 비율인 50.5%와 유사한 수준이다. 평균 연령은 56.5세로, 이는 전국 평균 연령인 50세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또한, 대학 졸업 비율은 46.2%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 졸업 비율인 4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표본 특성은 재정패널조사의 응답자가 다소 고연령층과 고학력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2]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주: 어두운 색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으며, 흰색은 응답 비율이 10% 미만을 나타냄
자료: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1〉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단위: %)

개인 세전소득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							
	0%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0% 초과
1,000만원	65.5	33.4	1.0	0.2	0.0	0.0	0.0	0.0
3,000만원	41.1	55.1	3.5	0.2	0.0	0.0	0.0	0.0
5,000만원	18.2	66.6	14.2	0.8	0.1	0.0	0.0	0.0
7,000만원	8.4	53.4	32.4	5.2	0.5	0.0	0.0	0.0
1억원	1.7	30.4	49.2	14.7	3.6	0.3	0.0	0.0
2억원	0.7	16.3	47.1	24.5	8.4	2.8	0.2	0.0
3억원	0.3	8.4	32.7	36.2	13.2	6.6	2.4	0.2
5억원	0.1	4.1	18.1	37.2	23.8	8.4	6.1	2.2
10억원	0.0	2.6	9.5	24.9	29.4	18.8	7.4	7.5

자료: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적정 소득세 비율을 0%로 응답한 경우 응답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정 소득세 비율을 0%로 응답한 비율은 세전소득이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일 때 각각 65.5%, 41.1%, 18.2%로 나타났다. 즉, 세전소득이 1천만원일 경우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65.5%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며, 세전 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응답자의 과반이 양(+)의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서 총급여 규모별 면세자[18] 비중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 1천만~1.5천만원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각각 100%와 86.7%이다. 2천만~3천만원 구간과 3천만~4천만원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각각 30.6%와 24.1%이며, 4.5천만~5천만원 구간과 5천만~6천만원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각각 7%와 3.1%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적정 소득세 비율이 구간 변수로 주어져 있어 이를 수량화하기 위해 각 구간을 특정 수치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0%'는 0%로, '1~10%'는 5%로, '51~60%'는 55%로, 그리고 '60% 초과' 구간은 80%로 수치화하였다. 세전소득 금액별로 적정 소득세 비율을 살펴보면, 세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 소득세 비율의 중앙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세전소득이 1,000만원일 때 중앙값은 0%였으나,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에서는 5%로 나타났다. 세전소득이 1억원과 2억원인 경우에는 15%, 3억원과 5억원에서는 25%, 그리고 10억원일 때는 35%로 증가하였다. 또한, 세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 소득세 비율의 평균값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전소득이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인 경우, 각각의 적정 소득세 비율 평균값은 1.9%, 3.4%, 5.7%, 9.0%, 14.0%, 18.3%, 23.5%, 29.4%, 36.6%로 증가하였다(〈표 Ⅲ-2〉).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누진적인 세제를 선호한다는 경향을 시사한다.

18) 이때 면세자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자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소득자를 의미함

〈표 Ⅲ-2〉 소득 금액별 적정 소득세 비율

(단위: %)

세전소득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1,000만원	0.0	1.9	2.9
3,000만원	5.0	3.4	3.6
5,000만원	5.0	5.7	4.8
7,000만원	5.0	9.0	6.7
1억원	15.0	14.0	8.1
2억원	15.0	18.3	9.7
3억원	25.0	23.5	11.5
5억원	25.0	29.4	13.9
10억원	35.0	36.6	16.9

자료: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패널조사의 적정 소득세 비율 응답값과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에 실시된 제15차 재정패널조사의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의 중앙값 및 평균을,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나타난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 평균과 비교하였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재정패널조사 응답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을 고려해 적정 세율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Fisman et al.(2020)에서 설문 문항에 '소득(income)'과 '근로소득(labor income)'을 구분해 사용하더라도 세부담 선호가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재정패널조사의 적정 소득세 비율 중앙값과 평균은 국세통계연보에 기록된 실효세율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 평균 실효세율은 1천만원 이하에서 0%, 3천만원 이하에서는 1% 미만이며, 3천만~4천만원 구간은 1.3%, 4천만~4.5천만원 구간은 2.3%, 5천만~6천만원 구간은 4.0%, 6천만~8천만원 구간은 5.5%, 8천만~1억원 구간은 8.1%, 1억~2억원 구간은 13.5%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패널조사의 적정 소득세 비율 중앙값 및 평균은 국세통계연보의 실효세율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평균 실효세율은 1억~2억원 구간에서 13.5%, 2억~3억원 구간에서 22.4%, 3억~5억원 구간에서 27.4%, 5억~10억원 구간에서 32.1%이다.

〈표 Ⅲ-3〉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의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

(단위: %)

총급여 규모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
1천만원 이하	0.0
1.5천만원 이하	0.0
2천만원 이하	0.2
3천만원 이하	0.6
4천만원 이하	1.3
4.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이하	3.0
6천만원 이하	3.9
8천만원 이하	5.5
1억원 이하	8.1
2억원 이하	13.5
3억원 이하	22.4
5억원 이하	27.4
10억원 이하	32.1
10억원 초과	39.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각 응답자가 선호하는 적정 소득세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Singhal(2021)의 방법에 따라 소득세 세율체계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세전소득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에 대한 응답값을 기준으로 선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강하게 누진적인(strictly progressive) 세제는 세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정 평균 세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유형이다. 이는 응답자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약하게 누진적인(weakly progressive) 세제는 세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 평균 세율이 적어도 한 구간에서 증가하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 적정 평균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이다. 소득이 증가할 때 세율도 상승할 수 있지만, 반드시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비례세(proportional tax)는 모든 세전소득 구간에 대해 동일한 평균 세율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응답자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약하게 역진적인(weakly regressive) 세제는 세전소득이 증가하는데도 적어도 한 구간에서 적정 평균 세율이 감소하며, 소득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낮은 구간의 세율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강하게 역진적인(strictly regressive) 세제는 세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 평균 세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유형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세율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적 선호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15차년도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누진적인 세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정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강한 누진세(strictly progressive)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11.7%였으며, 세전소득이 증가할 때 적정 평균 세율이 감소하지 않으며 적어도 한 구간에서는 세전소득에 따라 적정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약한 누진세(weakly progressive)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80.0%였다. 반면, 모든 구간에서 평균 세율이 동일한 비례세(proportional tax)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7.6%였으며, 역진세(regressive tax)를 선호하거나 모든 소득에 대해 0의 적정 세율을 응답한 경우는 각각 0.1%와 0.7%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Singhal(2021)에서는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을 활용하여 호주, 이탈리아 등 7개 국가의 적정 소득세 부담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응답자의 다수가 누진적인 세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강한 누진세를 선호하는 비율과 약한 누진세를 선호하는 비율의 합은 폴란드에서 55.8%로 가장 낮았으며, 스페인에서는 85.6%로 가장 높았다.

본고의 결과와 Singhal(2021)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ISSP 설문에서는 적정 소득세 비율 대신 적정 소득세 금액을 묻는 방

식이었으며, 재정패널조사의 직사각형 형태 응답지와는 달리 반복적인 서술형 질문을 사용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정 세부담을 금액으로 물을 경우, 덜 누진적인 세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Fisman et al., 2020). 또한, 직사각형 형태의 응답지는 누진세를 의미하는 대각선 형태의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정패널조사와 ISSP 설문에서 제시한 세전소득의 차이가 존재한다. ISSP에서는 비숙련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average annual wage of full-time unskilled worker)과 평균 임금의 2배, 4배, 8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시하였다. 또한, 두 설문조사 및 국가 간 인구사회적 특성의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Ⅲ-4〉 소득세 세율체계 선호 유형

(단위: %, 명)

	한국	한국 외 7개국 평균	호주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Strictly Progressive	11.65	37.97	34.27	21.04	34.21	32.47	37.62	23.5	62.2
Weakly Progressive	79.95	35.37	34.27	41.01	48.49	34.11	34.75	32.25	23.4
Proportional	7.62	7.15	13.85	7.06	1.78	1.99	12.86	14.25	3.00
Weakly Regressive	0.09	2.11	1.77	3.73	1.16	2.23	2.33	6.00	1.21
Strictly Regressive	–	0.78	0.39	1.33	0.39	0.82	0.82	3.00	0.57
No income tax	0.65	0.79	0.26	0.00	0.93	1.06	0.68	1.25	1.43
N	14,897	6,955	1,523	751	1,295	853	731	400	1,402

자료: 한국: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 외 국가: Monica Singhal(2021), p. 30, TABLE 3.

〈표 Ⅲ-5〉 적정 소득세 세율체계

(단위: %)

	선호하는 평균 세율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한국					
소득분포 백분위	47	72	93	99	100
중앙값	5	5	15	15	25
평균	3	6	14	18	23
표준편차	4	5	8	10	12

〈표 Ⅲ-5〉의 계속

(단위: %)

	선호하는 평균 세율			
	x	$2x$	$(4x)$	$8x$
호주				
소득분포 백분위	34	90	99	100
중앙값	16	20	25	30
평균	15	21	26	30
표준편차	8	8	11	14
체코				
소득분포 백분위	12	60	95	100
중앙값	10	10	15	20
평균	11	13	16	20
표준편차	6	6	8	10
헝가리				
소득분포 백분위	30	73	92	98
중앙값	0	8	17	25
평균	3	8	19	26
표준편차	6	8	14	14
이탈리아				
소득분포 백분위	48	92	92	100
중앙값	6	10	17	21
평균	8	13	19	23
표준편차	7	10	14	16
뉴질랜드				
소득분포 백분위	N/A	N/A	N/A	N/A
중앙값	14	20	25	30
평균	13	19	24	28
표준편차	8	7	9	11
폴란드				
소득분포 백분위	N/A	N/A	N/A	N/A
중앙값	10	10	14	20
평균	10	13	17	22
표준편차	9	10	12	16

〈표 Ⅲ-5〉의 계속

(단위: %)

	선호하는 평균 세율			
	x	$2x$	$(4x)$	$8x$
스페인				
소득분포 백분위	14	64	94	99
중앙값	1	10	17	25
평균	4	11	18	26
표준편차	5	8	11	16

주: x는 해당 국가의 full-time unskilled worker의 연평균 임금이며, $2x, 4x, 8x$는 평균 임금의 2배, 4배, 8배를 나타냄

자료: 한국: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 외 국가: Monica Singhal(2021), p. 31, TABLE 4.

〈표 Ⅲ-6〉 재정패널조사와 ISSP 기초통계

	표본	모집단
한국(N=14,897)		
여성 비율(%)	50.8	50.5
평균 연령	56.5	50.0
20대	6.0	14.9
30대	12.0	15.3
40대	16.3	18.7
50대	21.3	19.9
60대	21.0	17.1
70대	14.0	8.8
80대 이상	9.4	5.2
대학 졸업 비율(%)	46.2	41.5
호주(N=1,523)		
여성 비율(%)	44.5	50.6
평균 연령	49.5	43.4
대학 졸업 비율(%)	20.6	14.0
체코(N=751)		
여성 비율(%)	48.1	52.4
평균 연령	47.1	45.7
대학 졸업 비율(%)	11.5	8.7

〈표 Ⅲ-6〉의 계속

	표본	모집단
헝가리(N=1,295)		
여성 비율(%)	51.2	53.4
평균 연령	44.0	45.9
대학 졸업 비율(%)	14.2	12.1
이탈리아(N=853)		
여성 비율(%)	49.8	52.4
평균 연령	44.0	46.8
대학 졸업 비율(%)	6.1	6.2
뉴질랜드(N=731)		
여성 비율(%)	42.9	N/A
평균 연령	45.2	N/A
대학 졸업 비율(%)	17.1	N/A
폴란드(N=400)		
여성 비율(%)	45.0	55.4
평균 연령	45.7	47.2
대학 졸업 비율(%)	10.3	7.4
스페인(N=1,402)		
여성 비율(%)	43.4	51.5
평균 연령	42.0	45.7
대학 졸업 비율(%)	17.8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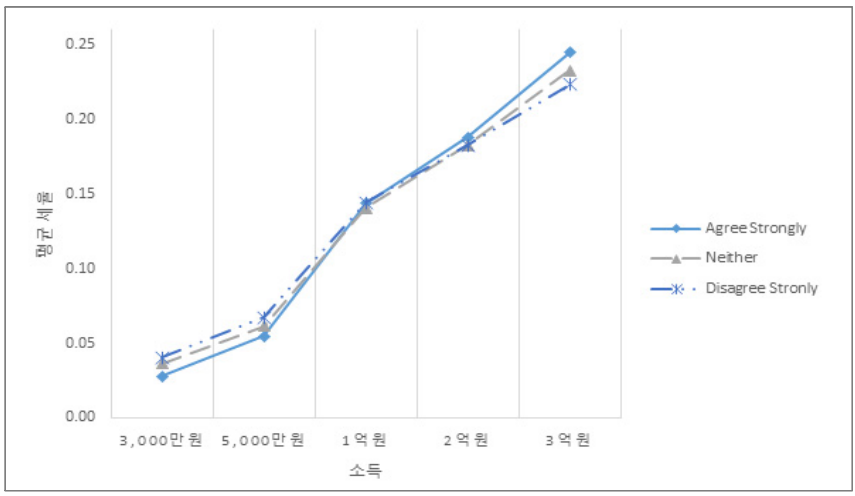
자료: 한국: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2020. 11. 1. 기준
한국 외 국가: Singhal(2021), p. 29, TABLE 2.

재정패널조사, WVS 등 설문조사에서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5차년도 재정패널조사의 문항에서는 "귀하는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도 인식과 적정 소득세 부담에 대한 선호를 비교함으로써 두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소득세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두 척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보장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누진적이지 않은 소득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 격차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적정 소득세율을 비교한 결과, 세전소득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개인의 노력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평균 선호 세율이 더 높았다. 반면, 세전소득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정부 정책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평균 선호 세율이 더 높았다.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의 평균 선호 세율은 정부 정책을 중요시하는 집단과 개인 노력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선호 세율 사이에 위치하였다.

[그림 Ⅲ-3] 적정 소득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자료: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7〉 적정 소득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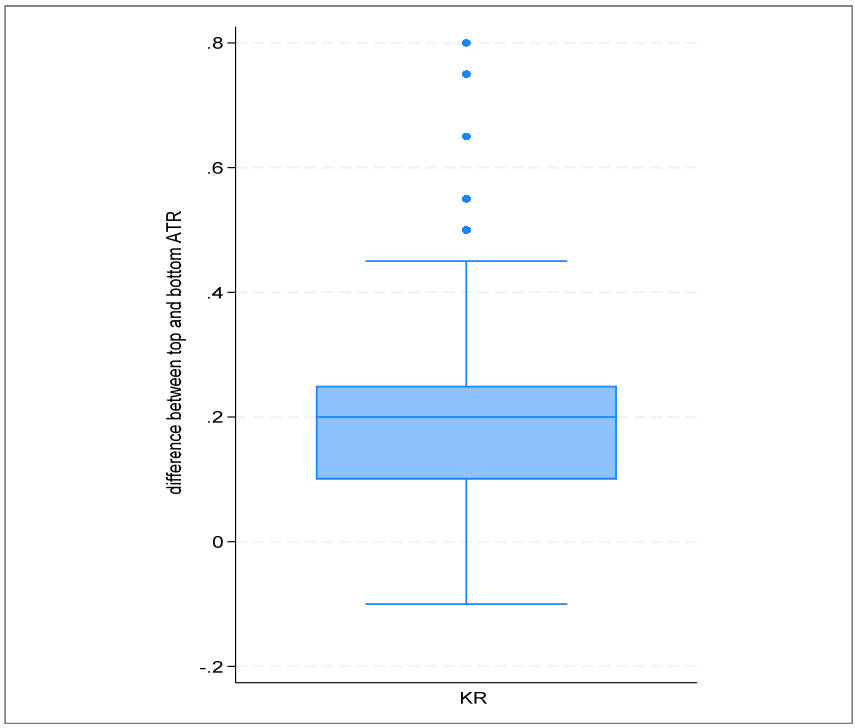
(단위: %)

소득격차 책임(정부)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정부정책	Agree Strongly	2.8	5.5	14.4	18.8	24.5
↕	Neither	3.6	6.1	14.1	18.3	23.3
개인노력	Disagree Strongly	4.0	6.7	14.4	18.3	22.3

자료: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의 분석에서 재정패널조사 응답자들이 누진적인 세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바, 누진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율 체계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Singhal, 2021). 첫째는 세율 구조 자체의 누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세제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분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실효 누진성 측정법이다. 실효 누진성은 로렌츠 곡선이나 지니 계수에서 파생되는 집중 곡선 등을 활용하여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Singhal(2021)의 연구 방식을 따라 구조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며, 최고 소득 구간과 최저 소득 구간 간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누진성을 측정한다. 이때 두 구간의 세율 차이가 클수록 응답자는 더 높은 수준의 누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방법에서는, 누진세의 경우 양의 값을, 비례세는 0을, 역진세는 음의 값을 가지므로 간단하면서도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전소득 3억원과 3천만원의 적정 소득세율 격차 분포를 상자그림(box-and-whisker plot)을 통해 살펴보면, 역진세(최고 소득 구간과 최저 소득 구간의 세율 격차가 음수)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일부 존재하나, 대다수 응답자는 누진세(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의 세율 격차가 양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세율 격차의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는 각각 10%, 20%, 25%이다. 한편,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의 범위의 1.5배를 초과하는 값으로 정의된 이상치는 총 343개로,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47.5%와 -12.5%로 관측되었다.

[그림 Ⅲ-4] 세전소득 3억원과 3천만원의 적정 소득세율 격차 분포



자료: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상속세

재정패널조사는 2023년에 실시된 16차년도 조사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적정 상속세 비율을 측정하였다. 응답 문항은 다음과 같다: “어떤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상속재산이 다음과 같을 때, 귀하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상속세는 해당 재산의 몇 %입니까?” 이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설명이 주어졌다. 조사 대상 상속재산은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총 9개의 범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재산 수준은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500억원이다. 각 범주별로 적정 상속세 비율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총 상속재산 대비 적정 상속세 비율’

을 15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선택 가능한 비율은 '0%', '5%', '10%', '15%', '20%'에서 '65%', '70%'까지 5% 단위로 제공되었다.

[그림 Ⅲ-5] 제16차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b6. 어떤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상속 재산이 다음과 같을 때, 귀하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상속세는 해당 재산의 몇 %입니까?

총 상속 재산	총 상속 재산 대비 적정 상속세 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1) 1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2) 3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3) 5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4) 10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5) 20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6) 30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7) 50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8) 100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9) 500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료: 제16차 재정패널조사 기준

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에서[19] 총 상속재산 대비 적정 상속세 비율을 0%로 응답한 비율은 총 상속재산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에 대하여 각각 63.6%, 40.5%, 18.9%, 6.1%이다. 즉,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에는 절반 이하의 응답자가 상속세 부과를 지지하는 반면, 3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양(+)의 상속세 부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에서 총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100% 과세 미달 상태로 나타났다. 과세 미달이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각종 공제 적용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를 의미한다. 과세 미달 비중은 1억~3억원, 3억~5억원 구간에서 각각 99.5%와 98.7%로 나타났으며, 5억~10억원, 10억~20억원 구간의 경우 각각 72.7%와 22.8%로 나타났다.

19) 15차년도 조사와 유사하게 고연령층 및 고학력층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8〉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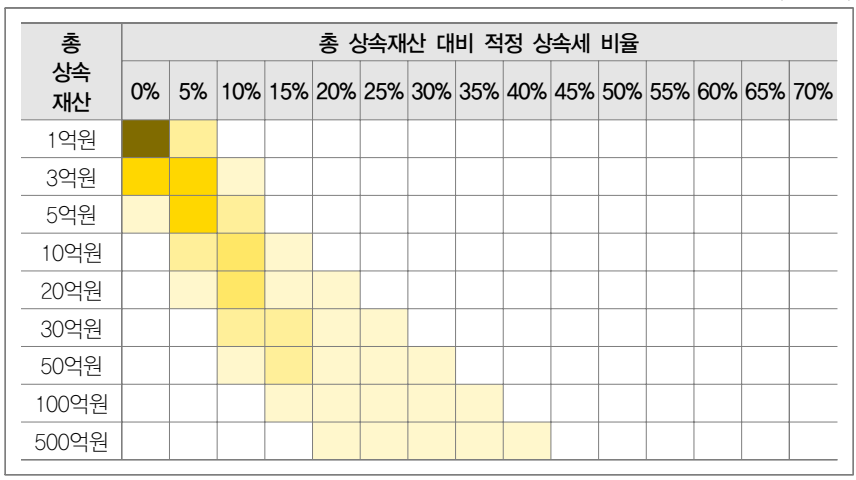
(단위: %)

총 상속 재산	총 상속재산 대비 적정 상속세 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1억원	63.6	27.5	6.7	1.0	0.7	0.1	0.2	0.1	0.0	0.0	0.0	0.0	0.0	0.0	0.0
3억원	40.5	40.5	13.8	2.4	2.1	0.2	0.2	0.1	0.1	0.0	0.0	0.0	0.0	0.0	0.0
5억원	18.9	40.9	25.7	9.0	3.4	0.8	0.8	0.1	0.1	0.2	0.0	0.0	0.0	0.0	0.0
10억원	6.1	28.5	33.6	16.6	9.8	2.1	2.1	0.4	0.4	0.1	0.3	0.0	0.0	0.0	0.0
20억원	2.1	15.4	33.7	18.9	15.1	8.3	3.3	0.9	1.3	0.3	0.4	0.2	0.1	0.0	0.0
30억원	1.3	7.7	25.6	22.1	15.7	12.4	8.5	2.7	2.2	0.5	0.7	0.3	0.3	0.1	0.1
50억원	0.7	3.8	15.0	21.3	18.0	12.9	12.7	7.2	3.3	1.5	2.0	0.3	0.5	0.5	0.1
100억원	0.4	1.8	8.2	15.5	17.9	13.4	13.7	11.9	7.9	2.8	3.3	1.3	0.8	0.3	0.9
500억원	0.3	1.4	5.4	9.1	14.2	12.7	13.7	11.2	12.8	7.0	5.5	2.3	1.8	0.8	1.9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6]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단위: %)



주: 어두운 색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으며, 흰색은 응답 비율이 10% 미만을 나타냄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상속재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 상속세 비율의 중앙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이 1억원일 때 중앙값은 0%

이지만, 3억원과 5억원일 때는 각각 5%로 증가하고, 10억원, 20억원, 30억원에서는 10%에 달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어서면 중앙값은 15%로 높아지며, 50억원일 때는 20%, 100억원과 500억원에서는 각각 25%와 30%로 꾸준히 증가한다. 적정 상속세 비율의 평균값 역시 상속재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원일 때 적정 상속세 비율의 평균은 2.5%이지만, 10억원일 때는 10.9%, 100억원일 때는 26.5%로 점차 증가한다.

〈표 Ⅲ-9〉 상속재산 금액별 적정 상속세 비율

(단위: %)

상속재산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1억원	0.0	2.5	4.2
3억원	5.0	4.4	5.1
5억원	5.0	7.3	6.1
10억원	10.0	10.9	7.2
20억원	10.0	14.4	8.5
30억원	15.0	17.8	9.8
50억원	20.0	21.9	11.2
100억원	25.0	26.5	12.5
500억원	30.0	31.2	13.9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패널조사의 적정 상속세 비율과 국세통계연보의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을 비교한 결과,[20] 상속재산 50억원 이하 구간에서 재정패널조사 응답값의 중앙값과 평균이 국세통계연보의 실효세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5억원 이하 구간에서 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0.9%,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에서 4.2%,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서 9.9%,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서 14.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 19.7%로 나타난다. 반

20) 16차 재정패널조사의 '총 상속재산 대비 적정 상속세 비율' 중앙값 및 평균을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의 '상속세 총상속재산가액 대비 총결정세액 비율' 평균과 비교한다.

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인 경우, 재정패널조사에서의 적정 상속세 비율 중앙값과 평균이 국세통계연보에 보고된 실효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서 29%,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42.7%에 이른다.

〈표 Ⅲ-10〉 2022년 결정 자료의 상속세 총 상속재산가액 대비 총 결정세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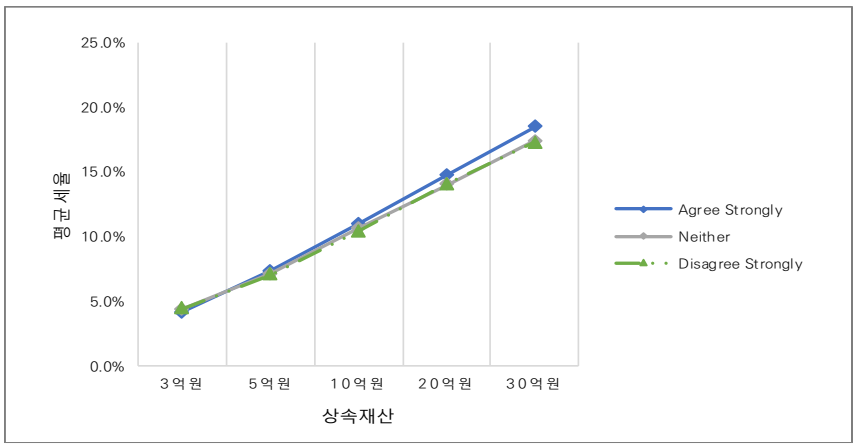
총상속재산가액 규모	총 상속재산가액 대비 총 결정세액 비율
1억원 이하	0.0
3억원 이하	0.0
5억원 이하	0.0
10억원 이하	0.9
20억원 이하	4.2
30억원 이하	9.9
50억원 이하	14.2
100억원 이하	19.7
500억원 이하	29.0
500억원 초과	42.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6-2-3.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Singhal(2021)의 세율체계 유형화 방식을 따라, 상속재산 3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을 기준으로 선호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누진적인 세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수록 적정 평균 세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강한 누진세(strictly progressive)를 지지한 응답자는 30.7%였다.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적어도 한 구간에서 평균 세율이 상승하며, 높은 상속재산 구간에서 낮은 세율을 보이지 않는 약한 누진세(weakly progressive)를 선호한 응답자는 63.5%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상속재산 구간에서 동일한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proportional tax)를 지지한 응답자는 4.5%에 불과했다. 또한, 역진세(regressive tax)를 선호하거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적정 세율을 0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0%와 1.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앞서 소득세 분석에서 사용한 방식과 유사하게,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집단과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집단의 적정 상속세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상속재산 5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개인 노력을 중시하는 집단'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상속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재산 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중시하는 집단'의 평균 선호 세율이 더 높았다.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의 평균 선호 세율은 두 집단의 선호 세율 중간에 위치하였다.

[그림 Ⅲ-7] 적정 상속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11〉 적정 상속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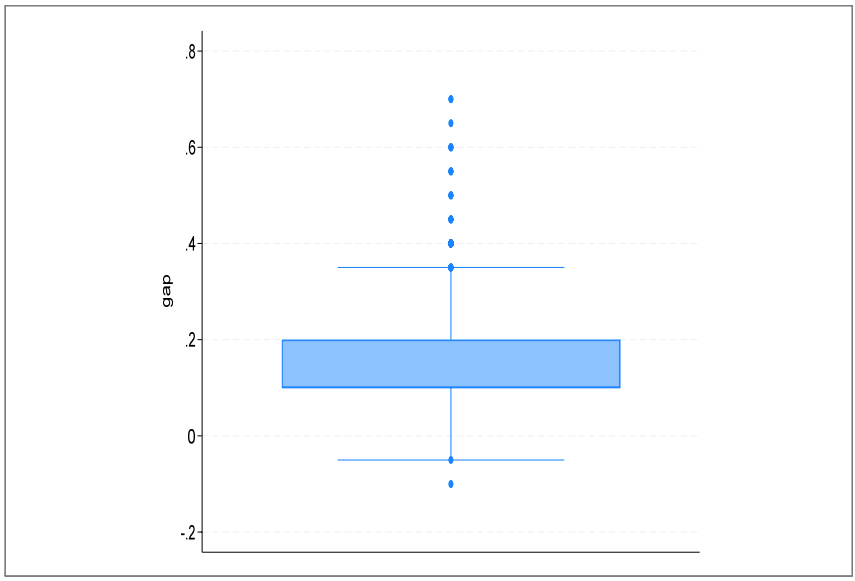
소득격차 책임(정부)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정부정책	Agree Strongly	4.2	7.4	11.0	14.8	18.4
↕	Neither	4.4	7.1	10.7	14.0	17.4
개인노력	Disagree Strongly	4.5	7.1	10.4	14.1	17.2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Singhal(2021)의 구조적인 접근법을 따라 상속세제의 누진성을 살펴볼 수 있다. 상속재산 30억원과 3억원의 적정 상속세율 격차 분포를 상자그림

(box-and-whisker plot)으로 그려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30억원에 대한 적정 세율이 3억원에 대한 적정 세율보다 높은 누진적인 상속세 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세율 격차의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는 각각 10%, 10%, 20%로 나타났다.

[그림 Ⅲ-8] 상속재산 30억원과 3억원의 적정 상속세율 격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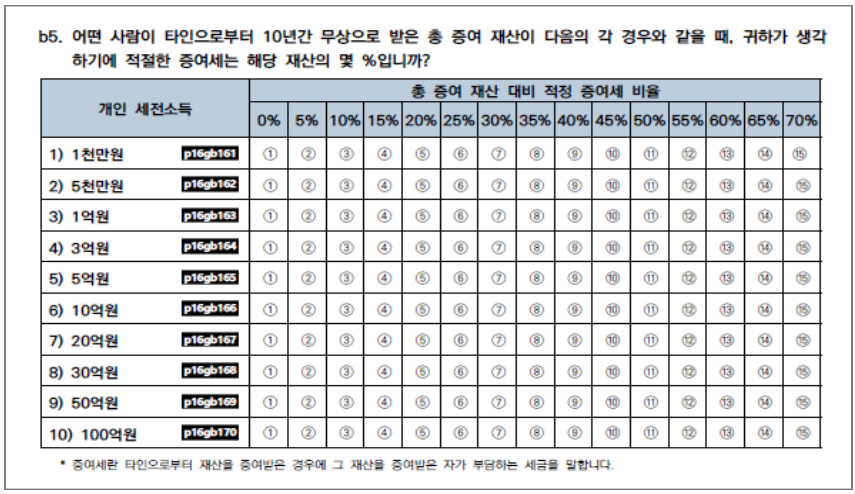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증여세

재정패널조사 2016년도 조사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 증여세 비율을 평가하였다. 조사에서 제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10년간 무상으로 받은 총 증여재산이 아래 각 범주에 해당할 때,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 증여세율은 해당 재산의 몇 %입니까?" 이때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설명이 제공되었다. 조사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범주는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100억원까지로, 각 금액은 10개 구간으로 구분되었다.[21] 응답자는 각 구간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증여세율을 선택하였으며, 선택 가능한 비율은 '0%'부터 '70%'까지 5% 단위로 총 15개 항목이 제공되었다.

[그림 Ⅲ-9] 제16차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b5.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10년간 무상으로 받은 총 증여 재산이 다음의 각 경우와 같을 때, 귀하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몇 %입니까?

개인 세전소득	총 증여 재산 대비 적정 증여세 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1) 1천만원 p16gb16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2) 5천만원 p16gb16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3) 1억원 p16gb16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4) 3억원 p16gb16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5) 5억원 p16gb16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6) 10억원 p16gb16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7) 20억원 p16gb16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8) 30억원 p16gb16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9) 50억원 p16gb16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0) 100억원 p16gb17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료: 제16차 재정패널조사 기준

적정 증여세 비율을 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여재산 규모가 1천만원일 때 76.2%, 5천만원일 때 60.1%, 1억원일 때 28.2%, 3억원일 때 11.5%로 증여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증여재산이 1천만원과 5천만원일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증여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과반수의 응답자가 양(+)의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2022년 증여세 과세 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 규모에 따른 과세미달 비중을 살펴보면,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 비중은 88.7%,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1.4%로 나타났다. 반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4%,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9.1%로, 증여재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과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1)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표 Ⅲ-12〉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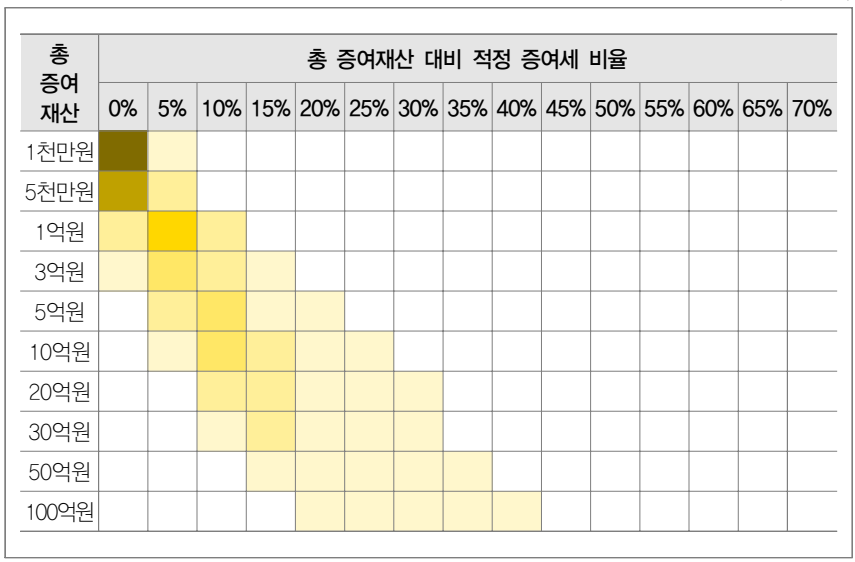
(단위: %)

총 증여 재산	총 증여재산 대비 적정 증여세 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1천만원	76.2	18.3	4.6	0.4	0.3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5천만원	60.1	29.2	8.8	1.1	0.5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1억원	28.2	42.6	21.7	5.0	1.6	0.3	0.4	0.1	0.0	0.0	0.0	0.0	0.0	0.0	0.0
3억원	11.5	38.7	28.2	13.4	6.1	1.0	0.6	0.3	0.2	0.1	0.0	0.0	0.0	0.0	0.0
5억원	5.6	23.9	32.7	17.7	12.5	5.0	1.5	0.3	0.3	0.3	0.2	0.0	0.0	0.0	0.0
10억원	2.3	10.6	31.3	21.2	14.9	10.5	6.2	1.3	0.6	0.2	0.5	0.1	0.2	0.0	0.0
20억원	1.2	5.6	20.9	23.4	17.2	12.0	10.4	4.8	2.4	0.7	0.5	0.2	0.3	0.2	0.1
30억원	0.8	3.0	12.9	20.8	18.3	13.1	12.1	9.1	5.1	1.9	1.3	0.4	0.4	0.4	0.2
50억원	0.5	1.9	7.5	14.2	18.1	14.3	13.5	10.8	9.1	4.1	3.1	0.9	0.7	0.6	0.6
100억원	0.3	1.5	4.7	9.1	14.4	12.8	15.5	11.1	11.5	8.1	5.6	1.9	1.3	0.7	1.5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10]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단위: %)



주: 어두운 색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으며, 흰색은 응답 비율이 10% 미만을 나타냄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응답자가 인식하는 적정 세부담은 증여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증여재산이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인 경우 적정 증여세 비율의 중앙값은 각각 0%, 0%, 5%, 5%, 10%, 15%, 15%, 20%, 25%, 30%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증여재산 구간에 대해 적정 증여세 비율의 평균값은 순서대로 1.5%, 2.7%, 5.6%, 8.6%, 11.8%, 15.6%, 19.2%, 22.8%, 26.7%, 30.9%로, 증여재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인 세부담 인식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표 Ⅲ-13〉 증여재산 금액별 적정 증여세 비율

(단위: %)

증여재산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1천만원	0.0	1.5	8.2
5천만원	0.0	2.7	4.1
1억원	5.0	5.6	5.2
3억원	5.0	8.6	6.3
5억원	10.0	11.8	7.5
10억원	15.0	15.6	8.7
20억원	15.0	19.2	10.0
30억원	20.0	22.8	11.2
50억원	25.0	26.7	14.5
100억원	30.0	30.9	13.4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패널조사의 '총 증여재산 대비 적정 증여세 비율'의 중앙값 및 평균과 2022년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 현황에서 나타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대비 총결정세액 비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증여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재정패널조사의 적정 증여세 비율의 중앙값과 평균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실효세율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평균 실효세율은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때 1.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 4.1%, 그리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일 때 5.9%이다.

반면, 증여재산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재정패널조사의 적정 증여세 비율의 중앙값과 평균이 국세통계연보의 실효세율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평균 실효세율은 7.9%, 10억원 초과 20억 이하의 경우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경우 18.6%,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경우 17.8%, 그리고 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5.9%로 나타났다.

〈표 Ⅲ-14〉 2022년 결정 자료의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대비 총 결정세액

(단위: %)

증여재산가액 규모	증여재산가액 대비 총 결정세액 비율
1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이하	1.2
1억원 이하	4.1
3억원 이하	5.9
5억원 이하	7.0
10억원 이하	7.9
20억원 이하	15.0
30억원 이하	18.6
50억원 이하	17.8
50억원 초과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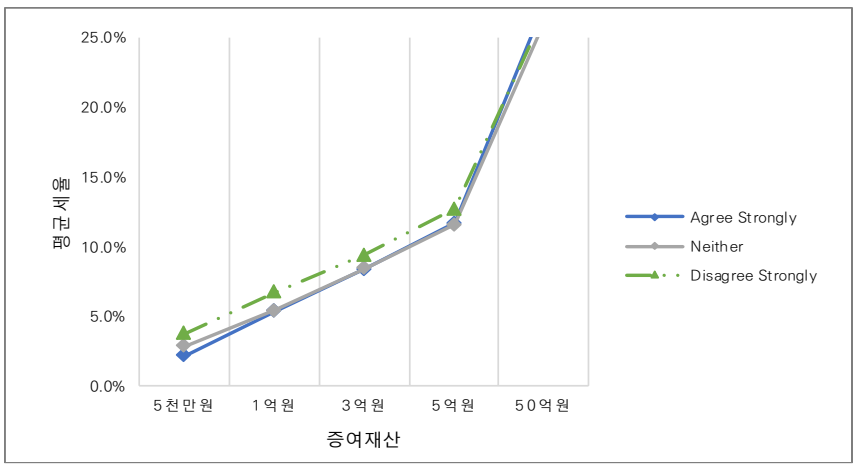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6-4-3.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 현황」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증여재산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세율체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Singhal, 2021), 대다수 응답자가 누진적인 세제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구간에서 증여재산이 증가할 때 적정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엄격한 누진세제(strictly progressive)를 선호한 응답자는 전체의 22.6%였다. 한편, 모든 구간에서 적정 평균 세율이 감소하지 않고, 최소한 한 구간에서 증여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상승하는 약한 형태의 누진세제(weakly progressive)를 선호한 응답자는 66.8%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 유형을 지지하였다. 또한,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proportional tax)를 선호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

역진세(regressive tax)를 선호하거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0%의 적정 세율을 응답한 경우는 각각 0%와 5.4%로 조사되었다.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집단과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집단 간 적정 증여세율을 비교한 결과, 각 집단의 선호도는 증여재산 규모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증여재산이 50억원 미만일 때는 개인 노력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평균 선호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증여재산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정부의 정책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평균 선호 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의 평균 선호 세율은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그림 Ⅲ-11] 적정 증여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주: 막대기와 수직선은 각각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Ⅲ-15〉 적정 증여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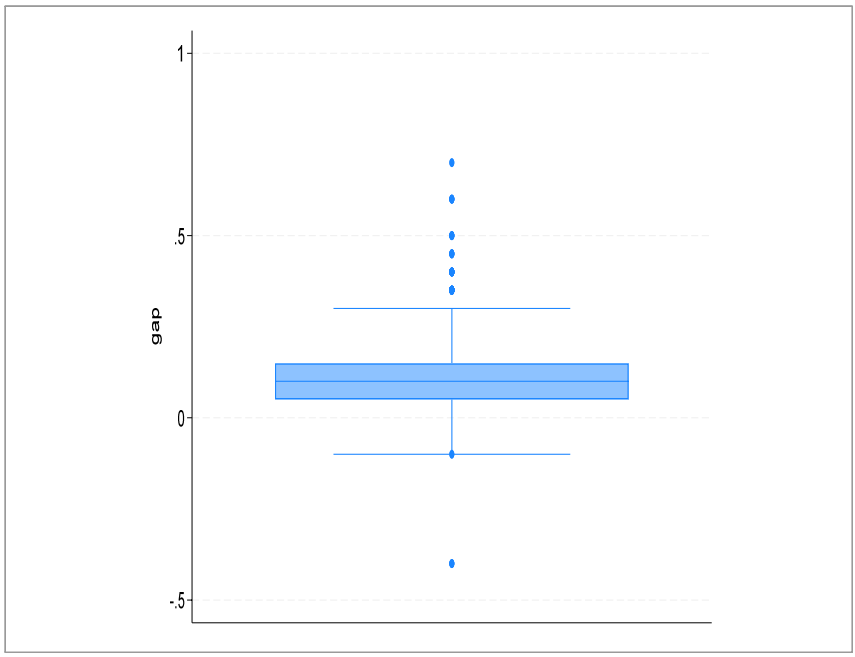
(단위: %)

소득격차 책임(정부)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50억원
정부정책	Agree Strongly	2.2	5.4	8.4	11.7	27.2
↕	Neither	2.8	5.4	8.5	11.6	25.9
개인노력	Disagree Strongly	3.8	6.7	9.4	12.7	26.5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Singhal(2021)의 구조적인 접근법을 따라 증여세제의 누진성을 살펴볼 수 있다. 증여재산 5억원과 5천만원의 적정 증여세율 격차 분포를 상자그림(box-and-whisker plot)으로 그려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5억원에 대한 적정 세율이 5천만원에 대한 적정 세율보다 높은 누진적인 증여세 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세율 격차의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는 각각 5%, 10%, 15%로 나타났다.

[그림 Ⅲ-12] 증여재산 5억원과 5천만원의 적정 증여세율 격차 분포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Ⅳ. 설문실험을 이용한 상속세 인식 및 선호 분석

1. 설문 및 실험 개요

가. 표본

본 연구를 위해 기획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는 상업적 설문조사 회사인 입소스에 의해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64세 3,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은 온라인패널 가입자 중 시도별, 성별, 연령 10세별 할당 추출되었으며, 표본은 할당 방식에 따라 설계된 대로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 표본 3,000명의 지역, 성별, 연령대 분포는 주민등록통계의 인구 구성비와 거의 일치한다. 비할당 변수들의 대표성을 살펴본 결과, 고용률은 대표성을 보였으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본 설문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와 읍면 지역 거주자의 비율은 과소 대표되었다.[22)]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 시간이 5분 미만인 응답자(전체의 6.7%)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23)] 설문 시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응답자가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는 등 성의 없는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결과는 이러한 이상치를 포함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2) 본인의 성향을 진보, 보수라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21%와 25%다.

23) 설문 시간의 중앙값은 12분이다.

〈표 Ⅳ-1〉 표본 특성: 할당 변수

(단위: 명, %)

구분		조사 표본		주민등록통계 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전체		3,000	100.0	100.0
시도별	서울	571	19.0	19.0
	부산	185	6.2	6.2
	대구	137	4.6	4.6
	인천	181	6.0	6.0
	광주	85	2.8	2.8
	대전	88	2.9	2.9
	울산	64	2.1	2.1
	세종	19	0.6	0.6
	경기	826	27.5	27.5
	강원	83	2.8	2.8
	충북	92	3.1	3.0
	충남	122	4.1	4.1
	전북	95	3.2	3.2
	전남	94	3.1	3.2
	경북	137	4.6	4.6
	경남	182	6.1	6.1
	제주	39	1.3	1.3
지역	수도권	1,578	52.6	52.6
	비수도권	1,422	47.4	47.4
성별	남자	1,532	51.1	51.1
	여자	1,468	48.9	48.9
연령대	만 19~29세	574	19.1	19.1
	만 30~39세	586	19.5	19.5
	만 40~49세	693	23.1	23.1
	만 50~59세	773	25.8	25.8
	만 60~64세	374	12.5	12.5

자료: 설문조사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년 8월 연령별 인구현황)

〈표 Ⅳ-2〉 표본 특성: 비할당 변수

(단위: 명, %)

구분	조사 표본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전체	3,000	100.0	100.0
고용률	2,086	69.5	69.2
4년제 대학 졸업	1,486	49.5	32.8
기혼	1,692	56.4	62.2

자료: 설문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2024)

이하에서는 응답자들이 어떻게 설문에 참여하게 되는지, 설문조사 회사의 타겟팅 방법, 그리고 전체 응답률에 대하여 설명한다.[24] 상업적 설문 조사 회사인 입소스는 다양한 패널로부터 구성된 검증된 설문 응답자 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현금이나 보상 프로그램의 포인트 등을 받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다.[25]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에 대한 보상은 각 패널 회사에서 수행하며, 보상 방식은 응답자와 협의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응답자들은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에 초대받는다. 선택 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설문주제나 설문주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학술 연구 목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라는 사실이 안내된다. 또한, 자신의 지식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응답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설문 참여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후 성별, 연령 등 대표성을 갖추기 위한 선별 질문이 제시되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세부 질문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설문 중도에 이탈하더라도[26] 이들의 인구통계 및 배경 정보가 남아 있어 관찰 가능한 특성에 따른 차별적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업체는 응답자들을 설문에 초대하기 전에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쿼터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쿼터에서 필요한 클릭 수를 정의한다. 즉, 설문 초대는 연구자가 요구하는 인구통계적 프로필에 맞춰 타기팅될

24) 설문조사는 Stantcheva(2021)의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25) 일반적으로는 상업적 용도의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26) 예를 들어, 응답자들이 설문 주제를 파악하고 이탈할 수 있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업체는 연령, 성별, 지역 등을 사전 타겟팅할 수 있다. 초대를 열어본 참가자 중 설문을 완료한 이들의 비율을 평균 응답률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전국 대표성 표본을 타기팅한 초대의 경우 3,000명이 설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대략 12,000명 정도가 초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집단별 응답률에는 차이가 있으며 도지역과 만 19~24세와 만 60~64세 여성의 응답률이 10% 이하로 가장 낮다. 따라서 이 집단의 쿼터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타기팅 초대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업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패널을 모집한다.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미래의 데이터 수집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잠재 참가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집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소셜 미디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회원 추천, 그리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된다. 패널 모집 과정은 설문조사 회사가 활용하는 마케팅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패널의 회원들은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을 추천하여 가입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나. 설문 내용

설문 구성은 내용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문항이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17개 시도와 읍면 거주 여부[27]), 최종 학력, 고용 상태, 개인과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결혼 여부, 자녀 수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다. 자산에 대한 문항에서는 먼저 순자산에 대한 개념 설명[28]이 제시되고, 이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지 여부와 순자산 규모에 대한 질문이 제시된다.

둘째, 정치적·사회적 선호에 관한 문항이다. 응답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

27) '귀하의 거주지는 동 지역입니까? 읍면 지역입니까?'

28) '순자산은 개인이나 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빚)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순자산=자산-부채). 예를 들어, 집, 차, 저축된 돈 같은 자산이 1억원 있고, 갚아야 할 대출금이 3천만원 있다면, 순자산은 1억원에서 3천만원을 뺀 7천만원이 됩니다.'

향을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선택하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답한다. 또한, 경제 제도와 자원 배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에 대한 견해, 성장과 분배의 상대적 중요성,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을 묻는다. 자산 불평등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하여 묻고, 재산 상위 10%와 하위 50% 가구들의 순자산 비중을 추정하게 한다. 이 외에도 긍정적 상호작용(positive reciprocity)과 부정적 처벌(negative reciprocity) 등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s)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셋째,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이다. 먼저, 모든 응답자에게 상속[29]과 상속세[30]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그리고 실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에게는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제시된다. 자세한 실험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이어서 상속세 인상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경제활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다. 또한, 상속세 인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행태 반응(e.g., 저축 감소, 노동 공급 및 기업 활동 감소, 조세 회피 및 탈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상속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가 장기적인 재정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 혹은 세부담 완화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의 공정성에 관한 문항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부유한 부모의 재산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유한 부모의 재산이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세에 대한 견해가 바뀌는지,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덜 부유한 가정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다.

---

29) '유산은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유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30)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남긴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유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은 상속인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넷째, 적정 상속세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필요성 및 세부담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에 더해, 적정 면세점과 상속재산가액별 적정 세부담 수준을 조사한다. 이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망자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가정한다.[31] 면세점에 대한 문항에서는 먼저 상속세 공제제도[32]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이후,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유산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산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제도하에서 사망자 100명 중 몇 명이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상속재산가액별 적정 세부담 수준은 다양한 유산 금액[33]을 제시한 후, 해당 유산에 대해 현행 제도에서 어느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이어서 적정한 상속세 수준이 얼마인지 묻는다. 단, 다음 절에서 설명할 각 실험집단의 절반의 응답자에게는 실제 세부담 정보를 제공[34]한 후 적정 세부담 수준을 묻는다. 현행 제도에서 세부담을 묻는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세부담을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

31) '지금부터는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한 상속세 수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적정한 세금 수준을 물어볼 예정이며, 모든 경우에서 사망자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32)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자가 남긴 유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산이 적을 경우 상속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33) 5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4) 실제 세부담은 2015~2021년 상속세 결정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유산의 ±10% 수준이고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관측치의 실효세율 평균으로 추정함

[그림 Ⅳ-1] 유산이 10억원인 경우에 대한 적정 세부담 수준 문항 예시

지금부터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한 상속세 수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적정한 세금 수준을 물어볼 예정이며, 모든 경우에 **사망자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1.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총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대략 얼마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산의 가치 대비 상속세의 비중을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세금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억 ~ 만원)**

2A. 유산이 **10억원**일 경우, 귀하가 생각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는 얼마입니까? 유산의 가치 대비 적정한 상속세의 비중을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세금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억 ~ 만원)**

2B.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유산이 **10억원**일 경우, **실제로는 대략 5천만원(유산의 5%)**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유산이 **10억원**일 경우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는 얼마입니까? 유산의 가치 대비 적정 상속세의 비중을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세금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억 ~ 만원)**

주: 유산이 10억원인 경우에 대한 적정 세부담 수준 문항 예시
자료: 저자 작성

다. 실험 개요

실험 참가자들은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네 개의 집단(G0, G1, G2, G3)으로 분류된다. Stantcheva(2021)의 실험과 유사하게 상속세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제시되며 실증적인 증거는 제공되지 않는다.[35] 응답자가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가 활용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전에 퀴즈가 있음을 안내한 뒤, 설명 후에는 두 개의 빈칸이 포함된 2지선다형 퀴즈가 제시된다. 응답자가 두 문제를 모두 맞히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설명과 퀴즈가 반복된다. 2회차 퀴즈에서도 틀릴 경우 정답이 제시되며, 이후 다음 문항으로 진행된다. 또한, 응답자들이 설명을 숙독할 수 있도록, 다른 문항과는 달리 글자가 하나씩 나타나는 타이핑 효과가 추가된다.

G0는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없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

35)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관련 연구가 미미하다.

보만 제공받는다. 이때 기본적인 정보는 유산과 상속의 의미, 상속세와 상속세 공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또한,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의 공정성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게 된다.[36] G0에 제공되는 정보는 모든 실험집단에 공통적으로 제공된다.

G1은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상속세가 부의 집중과 세습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며, 상속세가 부유한 가정의 자산을 사회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상속세로 징수된 세금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내용도 함께 설명된다.

G2는 상속세의 효율성 비용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상속세가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상속세로 인한 행태 변화의 예시로는 일부 개인이 노동을 줄이거나 저축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국가로 이주하려는 시도가 언급된다. 또한, 가족 사업을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체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제시된다.

G3은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와 효율 비용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받는다. 이는 최적조세이론에서 중요한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상충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재분배 효과와 효율 비용에 대한 설명 모두 단순한 통계나 제도에 대한 규범적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효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실험집단(G0, G1, G2, G3)의 절반은 적정 세부담 관련 문항에서 각 시나리오에 대한 실제 세부담 정보를 제공받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다. 응답자가 공제 금액과 세율체계 등 현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 세부담 정보는 응답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가 실제 세부담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수정

36) 상속세를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점에서 각각 기술하며 공정성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묻는 문항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응답자는 관련된 쟁점을 알게 된다.

함에 따라 적정 세부담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Bellani et al., 2024). 특히, 실제 세부담이 적정 세부담의 준거로 작용할 경우, 응답값이 실제값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정 세부담 측정 방식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 제공에 따른 8개 집단(상속세 효과 정보 제공에 따라 4개 × 실제 세부담 정보 제공에 따라 2개)을 무작위로 나누어 각 집단의 절반은 적정 상속세를 금액 단위로 응답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산가액 대비 비율로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단, 한 가지 응답 방식을 제시할 때 다른 형식에 따른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동시에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금액으로 응답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백분율이 계산되어 제시[37]되었고, 백분율로 응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계산되어 제시[38]되었다.

응답자가 소속되는 실험집단은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무작위로 배분하였다. 무작위 배정이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관찰 가능한 특성을 성공적으로 균형 있게 분배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무작위 배정이 의도한 대로 잘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37) 상속세 금액을 적어주시면, 유산의 가치 대비 세금의 비중을 퍼센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억 (　　)만원 = (　　)%

38) 유산의 가치 대비 상속세의 비중을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세금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억 (　　)만원

[그림 Ⅳ-2] G3에게 제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과 퀴즈

이제부터 상속세의 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후 아래 내용에 대한 간단한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퀴즈 정답을 맞혀야만 바로 다음 문항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는 부의 집중과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부유한 가정에서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상속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그러나 상속세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람들은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을 덜하거나 저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주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체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rogramming] 최초 설명 제시 시 응답자들이 숙독할 수 있도록, 한 글자씩 나타나도록 타이핑 효과

앞서 제시한 상속세 관련 설명문을 다시 보여 드립니다. 각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지 골라 주십시오.

□ 상속세는 부의 집중과 [1]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부유한 가정에서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상속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그러나 상속세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2]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람들은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을 덜하거나 저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주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체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1]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대물림 2) 저출산 3) 인플레이션

2. [2]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부정적인 2) 긍정적인

[programming] 모두 정답인 경우
"정답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programming] 그 외의 경우, 원래 설명을 한 번 더 보여주고 2차 퀴즈 페이지로 이동.
"오답이 있어 다시 문제 드립니다. 아래 설명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주: G3에게 제시되는 상속세 효과에 대한 설명과 퀴즈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 결과

가. 세제와 자산 분포에 대한 지식

먼저, 응답자의 세제 및 자산 분포에 대한 지식을 살펴본다. 세제에 대한 지식은 응답자에게 상속세 면세점,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 상속세 실효세율을 추정하게 하여 측정하였으며, 자산 분포에 대한 지식은 순자산 분포 상위 10%와 하위 5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도록 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지식 측정 문항의 답변을 종속변수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정치 성향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39]

〈표 Ⅳ-3〉의 1열과 2열에는 각각 상속세 면세점 금액과 납부 대상자 비율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상속세 면세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추정치와 중앙값은 각각 4.5억원과 3억원으로, 실제 면세점보다 작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세 면세점은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혜택이 더 크다. 또한, 2억원을 한도로 순 금융재산가액의 20%[40]를 공제할 수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고려할 경우 면세점은 5억원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41]

대다수 응답자들이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을 과대평가하였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피상속인의 비율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추정치는 35.2%, 중앙값은 30%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비율은 4.5%다. 납부 대상자 비율을 5% 미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39) 전체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집단, 소득 집단, 순자산 집단, 고졸 이하 여부, 고용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기혼 여부,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사전 지식 여부, 정치 집단이다. 단, 보고서에는 주요 변수들의 결과만 제시되어 있다.

40) 단,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 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41) 그 외로 6억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의 9.2%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응답자들이 상속세 면세점을 과소 추정하고 상속세 납부자 비율을 과대 추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상속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3〉 상속세 면세점에 대한 지식

	(1) Exemption threshold	(2) Percentage of taxpaying estates
Female	-4,525	3.4***
	(3,200)	(1.1)
Age 30~49	-5,112	2.5
	(6,736)	(1.8)
Age 50~64	-3,662	-1.7
	(8,814)	(1.9)
Middle-income	-3,682	2.6*
	(3,902)	(1.5)
High-income	3,543	1.4
	(5,736)	(1.9)
Middle-wealth	4,884	-0.0
	(3,310)	(1.4)
High-wealth	15,636***	-0.3
	(5,335)	(1.7)
No college	1,380	2.7*
	(5,870)	(1.6)
Progressive	653	-4.2***
	(3,342)	(1.3)
Conservative	3,912	-0.9
	(4,160)	(1.3)
Descriptive statistics		
Average perception	45,382	35.2
Actual value	50,000	4.5
Observations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은 유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에서 과대평가되고, 큰 구간에서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표 Ⅳ-4〉). 5억원의 유산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지만, 실효세율을 0%로 답한 응답자는 17.2%에 불과하였다. 유산 규모 5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에 대한 실제 실효세율은 누진적인 세율체계로 인해 각각 0%, 5%, 10%, 20%인데, 응답자들의 실효세율 인식 평균은 모두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산 규모가 100억원과 200억원인 경우, 실제 실효세율은 30%와 35%인데, 실효세율 인식 평균은 각각 26.6%와 29.0%로 실제 보다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표 Ⅳ-4〉 상속세 실효세율에 대한 지식

	Estimate of effective tax rate					
	(1) 0.5 billion Won	(2) 1 billion Won	(3) 2 billion Won	(4) 5 billion Won	(5) 10 billion Won	(6) 20 billion Won
Female	−2.0**	−3.2***	−3.4***	−3.5***	−3.1***	−3.2***
	(0.8)	(0.7)	(0.7)	(0.8)	(0.8)	(0.8)
Age 30~49	0.0	−0.2	0.3	−0.8	−0.1	−0.4
	(1.3)	(1.2)	(1.2)	(1.2)	(1.3)	(1.3)
Age 50~64	−3.6***	−1.7	−0.9	−0.7	0.8	1.2
	(1.4)	(1.3)	(1.3)	(1.4)	(1.4)	(1.4)
Middle-income	−2.1*	−1.0	−0.9	0.5	−0.3	0.6
	(1.1)	(1.0)	(1.0)	(1.0)	(1.1)	(1.2)
High-income	−1.4	0.7	−0.3	1.5	0.6	0.8
	(1.5)	(1.3)	(1.3)	(1.3)	(1.4)	(1.5)
Middle-wealth	0.2	−0.5	−0.1	−0.1	0.7	0.8
	(1.0)	(0.9)	(0.9)	(0.9)	(1.0)	(1.0)
High-wealth	−1.8	−1.1	0.1	0.6	1.2	1.6
	(1.3)	(1.1)	(1.1)	(1.1)	(1.2)	(1.2)
No college	−1.2	−0.9	−1.6*	−2.2**	−2.9***	−3.3***
	(1.1)	(1.0)	(1.0)	(1.0)	(1.1)	(1.1)
Progressive	−0.4	0.8	1.1	2.0**	2.4**	2.7***
	(1.0)	(0.9)	(0.9)	(0.9)	(0.9)	(1.0)
Conservative	1.8*	0.9	0.8	1.1	0.7	0.1
	(1.0)	(0.9)	(0.9)	(0.9)	(0.9)	(1.0)

〈표 Ⅳ-4〉의 계속

	Estimate of effective tax rate					
	(1) 0.5 billion Won	(2) 1 billion Won	(3) 2 billion Won	(4) 5 billion Won	(5) 10 billion Won	(6) 20 billion Won
Descriptive statistics						
Avg. perception	20.0	18.5	19.1	22.4	26.6	29.0
Actual rate	0	5	10	20	30	35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응답자들은 자산 분포의 양극단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 응답자들은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부의 59.7%를 차지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추정한 43%보다 높다. 또한, 응답자들은 순자산 하위 50%의 부의 비중이 22.4%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0%에 불과하다.[42]

〈표 Ⅳ-5〉 자산분포에 대한 지식

	(1) Share of wealth owned by top 10%	(2) Share of wealth owned by bottom 50%
Female	−6.9***	3.2***
	(1.1)	(0.8)
Age 30~49	3.9**	−0.9
	(1.6)	(1.3)
Age 50~64	6.2***	−4.3***
	(1.8)	(1.4)
Middle-income	0.2	−0.5
	(1.5)	(1.1)
High-income	−0.1	2.2
	(1.9)	(1.5)

4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

〈표 Ⅳ-5〉의 계속

	(1) Share of wealth owned by top 10%	(2) Share of wealth owned by bottom 50%
Middle-wealth	-1.6	0.0
	(1.3)	(1.0)
High-wealth	-0.3	-1.7
	(1.6)	(1.2)
No college	-0.8	3.2**
	(1.5)	(1.3)
Progressive	4.2***	-2.6***
	(1.3)	(1.0)
Conservative	0.4	1.8*
	(1.2)	(1.0)
Descriptive statistics		
Average perception	59.7	22.4
Actual value	43	10
Observations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자산가들은 상속세 면세점을 더 높게 추정한다. 그러나 다른 종속변수들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들과 여성은 상속세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며, 자산 분포가 덜 집중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50세 이상 고령층은 자산 분포가 더 집중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중립 성향의 응답자들에 비해 상속세를 내는 가구의 비율을 더 낮게, 즉 더 정확하게 인식하며, 50억원 이상의 유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더 높게 평가한다. 또한, 상위층의 부의 비율을 더 크게, 하위 50%의 부의 비율은 더 작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 실효세율, 자산 분포 등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Alesina, Miano, and Stantcheva, 2020).

나. 세제로 인한 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

이어서 세제로 인한 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먼저, 상속세 인상이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인식하는지, 상속세 인하가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또한 상속세 완화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표 Ⅳ-6〉에서 각 열의 종속변수는 해당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를 1로 설정한 더미변수다. 독립변수는 앞의 분석 모형과 동일하다.

〈표 Ⅳ-6〉 상속세의 효율 비용

	(1) Raising the tax hurts economy	(2) Lowering the tax helps economy	(3) Laffer effect
Female	−0.07***	−0.07***	−0.02
	(0.02)	(0.02)	(0.02)
Age 30~49	0.03	−0.04	−0.02
	(0.03)	(0.03)	(0.03)
Age 50~64	−0.02	−0.02	−0.07**
	(0.03)	(0.03)	(0.03)
Middle-income	0.03	0.00	0.03
	(0.03)	(0.02)	(0.03)
High-income	0.05	0.07**	0.05
	(0.03)	(0.03)	(0.03)
Middle-wealth	0.01	−0.00	0.02
	(0.02)	(0.02)	(0.02)
High-wealth	0.09***	0.10***	0.05*
	(0.03)	(0.03)	(0.03)
No college	−0.00	−0.04	−0.01
	(0.03)	(0.02)	(0.03)
Progressive	−0.08***	−0.04*	−0.12***
	(0.02)	(0.02)	(0.02)

〈표 Ⅳ-6〉의 계속

	(1) Raising the tax hurts economy	(2) Lowering the tax helps economy	(3) Laffer effect
Conservative	0.12***	0.13***	0.10***
	(0.02)	(0.02)	(0.02)
G1	−0.03	0.01	−0.06**
	(0.03)	(0.02)	(0.03)
G2	0.09***	0.08***	0.00
	(0.03)	(0.02)	(0.03)
G3	0.06**	0.03	−0.07**
	(0.03)	(0.02)	(0.03)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0.42	0.33	0.58
Control mean	0.39	0.30	0.61
Observations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속세 인상이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표본의 42%로 나타났다(〈표 Ⅳ-6〉, 1열). 고자산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 그리고 세제의 효율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G2와 G3 집단은 상속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와 여성들은 세부담 증가로 인한 왜곡 효과를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했다. 상속세 인하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표 Ⅳ-6〉, 2열).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 그리고 G2 집단의 응답자들은 상속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응답자의 58%가 상속세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정부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인식했다(〈표 Ⅳ-6〉, 3열). 이러한 경향은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졌으며, 반대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과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응답자들에서는 덜 나타났다.[43] 효율 비용

에 대한 정보를 받은 응답자들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상속세 인하로 인한 왜곡 효과 축소가 국가 재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실시된 Stantcheva(2021)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분의 1 미만이었으며, 상속세 인하가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절반이었다. 즉, 우리나라 응답자들이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7〉 상속세 인상에 따른 행태 반응에 대한 인식

	(1) Save less	(2) Work less	(3) Evade taxes	(4) Immigration
Female	−0.02	−0.02	0.00	−0.02
	(0.02)	(0.02)	(0.02)	(0.02)
Age 30∼49	−0.01	−0.03	0.00	−0.04
	(0.02)	(0.02)	(0.03)	(0.03)
Age 50∼64	−0.04	−0.02	−0.00	−0.10***
	(0.03)	(0.03)	(0.03)	(0.03)
Middle-income	0.03	0.04*	0.01	−0.01
	(0.02)	(0.02)	(0.03)	(0.02)
High-income	0.03	0.03	0.00	0.03
	(0.03)	(0.03)	(0.03)	(0.03)
Middle-wealth	−0.01	−0.01	−0.03	−0.01
	(0.02)	(0.02)	(0.02)	(0.02)
High-wealth	0.03	0.04	0.02	0.03
	(0.02)	(0.03)	(0.03)	(0.03)
No college	0.01	−0.00	−0.00	−0.02
	(0.02)	(0.02)	(0.03)	(0.03)
Progressive	0.02	−0.02	0.05*	−0.03
	(0.02)	(0.02)	(0.02)	(0.02)

43)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상속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경우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세제의 왜곡 효과를 축소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Benabou and Tirole, 2006).

〈표 Ⅳ-7〉의 계속

	(1) Save less	(2) Work less	(3) Evade taxes	(4) Immigration
Conservative	0.07***	0.08***	0.05**	0.05**
	(0.02)	(0.02)	(0.02)	(0.02)
G1	−0.01	−0.01	0.08***	0.02
	(0.02)	(0.02)	(0.03)	(0.03)
G2	0.03	0.04*	0.06**	0.03
	(0.02)	(0.02)	(0.03)	(0.03)
G3	−0.02	0.02	0.08***	0.05**
	(0.02)	(0.02)	(0.03)	(0.03)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0.19	0.21	0.50	0.35
Control mean	0.19	0.19	0.45	0.33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속세 인상에 따른 행동 반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가 인상될 경우 상속세 대상자들이 자녀를 위한 저축을 줄이는지, 일을 덜 하거나 사업 및 창업 활동을 줄이는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숨기는지, 또는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Ⅳ-7〉에서 종속변수는 상속세 대상자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설정한 더미변수다.[44]

응답자들은 상속세에 대한 행태 반응이 저축이나 노동 공급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보다 조세 회피나 탈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인상이 저축과 노동 공급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반면, 상속세 인상이 재산의 일부를 숨기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와 35%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결과와 일관되게,

44) '매우 많은 영향', '많은 영향', '보통 정도의 영향', '약간의 영향', '전혀 영향 없음' 중에 '매우 많은 영향'과 '많은 영향'을 선택한 경우 1로 설정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상속세에 대한 행태 반응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행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G2와 G3 집단은 조세회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다. 재분배 효과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인식은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표 Ⅳ-8〉). 진보 성향 응답자 중 상속세 인상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48%로, 중도와 보수 성향 응답자의 비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G1 및 G3 집단과 50대 이상 고령자는 부의 집중 완화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상속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보는지, 상속인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Farhi and Werning, 2013),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상황 설명과 함께 문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저축한 부유한 부모의 재산이 사망 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이 공정한지 또는 불공정한지 물었다. 이때 53%(〈표 Ⅳ-8〉, 2열)의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나, 부유한 부모의 재산이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을 때는 상속세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45%(〈표 Ⅳ-8〉, 3열)로 감소하였다. 두 설문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특성은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피상속인 관점에서 상속세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었다. 상속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공정한지 또는 불공정한지 물었다(〈표 Ⅳ-8〉, 4열). 응답자의 55%는 이를 공정하다고 답했으며, 고자산가 및 보수적인 응답자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점을 통합하여 상속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자신의 견해에 가까운 쪽을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Ⅳ-8〉, 5열). 상속세를 지지하는 의견은 “일부 자녀가 더 부유한 가

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삶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상속세를 반대하는 의견은 "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삶을 시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부모가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일부는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응답자의 40%는 부유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더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보수 집단과 고자산가는 상속세 반대 견해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와 여성 및 고령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일부는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Stantcheva(2021)의 설문조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저축한 부유한 부모의 재산이 사망 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점을 함께 제시한 문항에서 상속세를 지지한 비율이 58%로, 각각 본 연구의 53%와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응답자들이 상속세를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45]

〈표 Ⅳ-8〉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1)	(2)	(3)	(4)	(5)
	Redistributive effect	Tax fairness			
		Hardworking parents	Well-inherited parents	Children's side	Trade-off
Female	0.01	0.00	-0.03	0.03	-0.04**
	(0.02)	(0.02)	(0.02)	(0.02)	(0.02)

45) 다만, 부유한 부모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것이라는 설명을 추가했을 때, 상속세를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공정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Stantcheva(2021)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Ⅳ-8〉의 계속

	(1)	(2)	(3)	(4)	(5)
	Redistributive effect	Tax fairness			
		Hardworking parents	Well-inherited parents	Children's side	Trade-off
Age 30~49	-0.00	0.04	0.01	-0.04	-0.01
	(0.02)	(0.03)	(0.03)	(0.03)	(0.03)
Age 50~64	0.08**	-0.05	-0.09***	-0.05	-0.10***
	(0.03)	(0.03)	(0.03)	(0.03)	(0.03)
Middle-income	-0.02	0.01	0.02	0.05*	0.04
	(0.02)	(0.03)	(0.03)	(0.03)	(0.03)
High-income	0.00	-0.02	0.02	0.01	0.03
	(0.03)	(0.03)	(0.03)	(0.03)	(0.03)
Middle-wealth	0.00	0.01	0.00	0.02	0.00
	(0.02)	(0.02)	(0.02)	(0.02)	(0.02)
High-wealth	-0.01	0.04	-0.01	0.07**	0.06**
	(0.03)	(0.03)	(0.03)	(0.03)	(0.03)
No college	-0.04*	0.04	0.04	0.00	-0.02
	(0.02)	(0.03)	(0.03)	(0.03)	(0.03)
Progressive	0.20***	-0.11***	-0.10***	-0.03	-0.09***
	(0.02)	(0.02)	(0.02)	(0.02)	(0.02)
Conservative	-0.03	0.03	0.03	0.08***	0.06**
	(0.02)	(0.02)	(0.02)	(0.02)	(0.02)
G1	0.08***	-0.00	-0.04*	0.06**	-0.01
	(0.02)	(0.03)	(0.03)	(0.03)	(0.03)
G2	0.01	0.02	-0.00	0.03	0.02
	(0.02)	(0.03)	(0.03)	(0.03)	(0.03)
G3	0.05**	-0.02	-0.04	-0.01	0.03
	(0.02)	(0.03)	(0.03)	(0.03)	(0.03)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0.30	0.53	0.45	0.55	0.40
Control mean	0.26	0.54	0.48	0.53	0.39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

〈표 Ⅳ-9〉에는 상속세 인상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상속세를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8%였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6%,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집단과 고자산가에서는 상속세 인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고 상속세 인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진보 성향 집단,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G1 집단, 그리고 여성에서는 상속세 인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상속세 인하를 선호하는 비율이 낮았다. 한편,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와 효율 비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은 G3 집단의 인식은 대조군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가 선호하는 적정 면세점은 앞 절에서 분석한 실제 면세점 추정치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적정 면세점의 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9.6억원과 5억원이며, 실제 면세점 추정치의 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4.5억원과 3억원이다. 적정 면세점과 실제 면세점 추정치가 동일한 응답자는 전체의 33.5%며, 적정 면세점이 더 큰 경우는 53.8%, 실제 면세점 추정치가 더 큰 경우는 12.7%로 나타났다. 적정 면세점 응답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1억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23.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3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25%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3%다.

적정 납부 대상자 비율은 실제 납부 대상자 비율 추정치와 유사하며, 평균값이 34.9%로 거의 동일하다. 이는 적정 납부 대상자 비율이 최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대상 비율(2022년 기준 4.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적정 납부 대상자 비율이 적정 면세점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이유는 앞 절에서 확인된 응답자들의 유산 분포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정 면세점과 납부 대상자 비율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자산가와 보수 성향 집단은 더 높은 면세점과 낮은 납부 대상자 비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진보 성향 집단, 그리고

여성은 더 낮은 면세점과 더 높은 과세대상 비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과세대상 비율 결과에서 정치 성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상속세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은 면세점에 대한 선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Ⅳ-9〉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

	(1) Tax increase	(2) Tax decrease	(3) Exemption threshold	(4) Percentage of taxpaying estates
Female	0.04**	-0.06***	-42,907***	4.16***
	(0.02)	(0.02)	(9,945)	(1.17)
Age 30~49	0.02	-0.03	6,494	1.58
	(0.03)	(0.03)	(12,875)	(1.85)
Age 50~64	0.03	-0.10***	4,036	-1.23
	(0.03)	(0.03)	(17,444)	(2.02)
Middle-income	0.00	0.02	2,177	0.21
	(0.02)	(0.03)	(12,136)	(1.56)
High-income	-0.02	0.03	30,523**	-1.11
	(0.03)	(0.03)	(15,045)	(2.00)
Middle-wealth	-0.04**	0.01	12,939	-4.19***
	(0.02)	(0.02)	(11,595)	(1.44)
High-wealth	-0.08***	0.13***	39,420**	-5.92***
	(0.03)	(0.03)	(17,174)	(1.79)
No college	0.03	-0.01	-18,115**	5.36***
	(0.03)	(0.03)	(8,311)	(1.71)
Progressive	0.14***	-0.12***	-26,154***	1.85
	(0.02)	(0.02)	(9,293)	(1.43)
Conservative	-0.05***	0.14***	28,681**	-0.69
	(0.02)	(0.02)	(13,228)	(1.37)
G1	0.06**	-0.10***	-19,392	0.68
	(0.02)	(0.03)	(13,474)	(1.59)
G2	-0.03	0.02	-11,915	-0.97
	(0.02)	(0.03)	(14,990)	(1.58)
G3	0.01	-0.04	-10,731	0.21
	(0.02)	(0.03)	(15,341)	(1.61)

〈표 Ⅳ-9〉의 계속

	(1) Tax increase	(2) Tax decrease	(3) Exemption threshold	(4) Percentage of taxpaying estates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0.28	0.46	95,669	34.9
Control mean	0.27	0.48	105,907	35.0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상속세 체계는 실제 세제에 비해 덜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0〉). 유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에서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세율이 실제 세율보다 높았고, 유산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세율이 실제보다 낮았다. 예를 들어, 유산이 5억원인 경우 실제 세부담은 없지만, 응답자가 인식하는 적정한 유산 대비 세액 비율의 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12%와 5%다. 적정 세율을 0%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1%이며, 10%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6%다. 반면, 유산이 200억원인 경우 실제 실효세율은 35%인데. 적정 실효세율의 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25%와 20%로 나타났다. 적정 세율을 35%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은 약 35%다.

적정 세율은 앞서 논의한 실효세율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 모든 구간에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유산 규모가 커질수록 두 값의 격차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유산에 대한 두 변수의 평균 격차는 8.0%포인트이지만, 200억원의 유산에 대한 격차는 3.1%포인트로 감소한다. 이는 응답자들이 유산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는 현재의 세부담 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10억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2%포인트에서 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한다. 반면, 보수 성향 집단은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누진적인 세제를 선호하

며, 이는 규모가 작은 유산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규모가 큰 유산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50대 이상의 고령자는 반대로 더 누진적인 세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선호한다.

상속세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전반적으로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계수가 1% 이하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보만 제공받은 G1 집단의 경우, 200억원에 대한 적정 세율이 2%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반면, 실제 실효세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응답자의 적정 세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흥미롭게도, 실효세율 추정치 평균이 실제 실효세율보다 높은 50억원 이하 구간에서 정보 제공이 적정 세율을 감소시켰다. 이는 현행 제도의 세부담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세부담에 대한 준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Ⅳ-10〉 상속세 적정 세율

	Optimal estate tax rate					
	(1) 0.5 billion Won	(2) 1 billion Won	(3) 2 billion Won	(4) 5 billion Won	(5) 10 billion Won	(6) 20 billion Won
Female	−0.5	−1.2*	−1.8***	−2.5***	−1.4*	−1.8**
	(0.7)	(0.7)	(0.7)	(0.7)	(0.8)	(0.8)
Age 30~49	−1.3	−0.7	−1.1	−1.0	−0.1	0.5
	(1.2)	(1.1)	(1.1)	(1.2)	(1.2)	(1.3)
Age 50~64	−3.3**	−2.2*	−1.5	−0.3	1.6	3.0**
	(1.3)	(1.2)	(1.2)	(1.3)	(1.4)	(1.4)
Middle-income	−0.3	−0.5	−0.6	−0.8	−0.9	0.1
	(1.0)	(0.9)	(0.9)	(1.0)	(1.1)	(1.1)
High-income	1.3	−0.1	−0.0	0.1	−0.7	−0.3
	(1.3)	(1.2)	(1.2)	(1.3)	(1.4)	(1.5)
Middle-wealth	−1.5	−1.2	−1.1	0.1	0.1	0.2
	(0.9)	(0.8)	(0.8)	(0.9)	(1.0)	(1.0)

〈표 Ⅳ-10〉의 계속

	Optimal estate tax rate					
	(1) 0.5 billion Won	(2) 1 billion Won	(3) 2 billion Won	(4) 5 billion Won	(5) 10 billion Won	(6) 20 billion Won
High-wealth	-3.8***	-3.1***	-2.4**	-1.1	-0.7	0.0
	(1.1)	(1.0)	(1.0)	(1.1)	(1.2)	(1.2)
No college	0.5	-0.3	-0.3	-1.0	-1.3	-1.3
	(1.1)	(0.9)	(1.0)	(1.0)	(1.1)	(1.1)
Progressive	0.1	1.8**	2.5***	3.9***	4.7***	4.6***
	(0.8)	(0.8)	(0.8)	(0.9)	(1.0)	(1.0)
Conservative	1.6*	0.8	-0.0	-1.3	-1.4	-2.1**
	(0.9)	(0.8)	(0.8)	(0.9)	(0.9)	(1.0)
G1	-0.2	0.0	0.4	1.5	1.3	2.2*
	(1.0)	(0.9)	(0.9)	(1.0)	(1.1)	(1.1)
G2	0.9	0.8	0.8	1.3	0.8	0.9
	(1.1)	(1.0)	(1.0)	(1.0)	(1.1)	(1.1)
G3	-0.0	0.1	0.5	0.5	0.8	1.0
	(1.0)	(0.9)	(0.9)	(1.0)	(1.1)	(1.1)
Tax amount info	-3.2***	-4.9***	-4.6***	-3.4***	-1.0	0.5
	(0.7)	(0.6)	(0.7)	(0.7)	(0.8)	(0.8)
Percent	-3.3***	-0.9	0.7	1.9***	3.1***	5.4***
	(0.7)	(0.6)	(0.7)	(0.7)	(0.8)	(0.8)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12.0	13.3	15.6	19.6	24.1	25.9
Control mean	11.7	13.0	15.2	18.7	23.4	24.9
Actual rate	0	5	10	20	30	35
Estimate of the actual	20.0	18.5	19.1	22.4	26.6	29.0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이질성 분석

본 절에서는 세제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집단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앞선 분석에서 납세자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정치적 성향과 자산 수준에 따라 세제 효과에 대한 설명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검토한다.[46] 이하의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상속세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적정 면세점, 그리고 적정 실효세율이며, 통제변수는 앞선 분석과 동일하다. 단, 아래 표에서는 주요 관심 변수와 이 변수와 실험집단 변수의 교차항만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처치 효과의 체계적인 이질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상속세 인상 및 인하에 대한 견해와 면세점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적정 세율의 경우 재분배 효과와 효율 비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을 때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고액 유산에 대한 선호 세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재분배 효과 또는 효율 비용 중 한 가지 정보만 제공한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다.

〈표 Ⅳ-11〉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정치적 성향에 따른 이질성)

	(1) Tax increase	(2) Tax decrease	(3) Exemption threshold	(4) Percentage of taxpaying estates
Progressive	0.15***	-0.18***	-59,958**	1.99
	(0.05)	(0.05)	(23,811)	(2.88)
Conservative	-0.05	0.11**	-4,665	-2.67
	(0.04)	(0.04)	(29,707)	(2.71)
G1	0.05	-0.12***	-39,678*	-0.30
	(0.03)	(0.04)	(21,434)	(2.17)
G2	-0.01	-0.01	-31,065	-0.61
	(0.03)	(0.04)	(24,907)	(2.22)

46) 실제 세부담 확인 여부에 따른 이질성도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1〉의 계속

	(1) Tax increase	(2) Tax decrease	(3) Exemption threshold	(4) Percentage of taxpaying estates
G3	0.01	−0.06	−33,350	−1.11
	(0.03)	(0.04)	(21,661)	(2.27)
G1xProgressive	0.01	0.09	44,681*	0.83
	(0.07)	(0.06)	(25,545)	(4.05)
G2xProgressive	−0.04	0.08	44,146	−0.52
	(0.07)	(0.07)	(29,560)	(3.96)
G3xProgressive	0.00	0.07	45,454*	−0.82
	(0.07)	(0.07)	(26,156)	(4.02)
G1xConservative	0.04	0.04	43,714	3.28
	(0.06)	(0.06)	(34,105)	(3.87)
G2xConservative	−0.04	0.06	38,865	−1.15
	(0.05)	(0.06)	(35,266)	(3.79)
G3xConservative	0.01	−0.00	50,034	5.60
	(0.05)	(0.06)	(42,106)	(3.86)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0.28	0.46	95,669	34.9
Control mean	0.27	0.48	105,907	35.0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Ⅳ-12〉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자산 수준에 따른 이질성)

	(1) Tax increase	(2) Tax decrease	(3) Exemption threshold	(4) Percentage of taxpaying estates
Middle-wealth	−0.02	0.00	18,861	−6.01**
	(0.04)	(0.04)	(23,158)	(2.74)
High-wealth	−0.10**	0.12**	53,684	−9.02***
	(0.05)	(0.05)	(39,429)	(3.06)
G1	0.05	−0.11***	−19,665*	1.58
	(0.04)	(0.04)	(11,752)	(2.91)

〈표 Ⅳ-12〉의 계속

	(1) Tax increase	(2) Tax decrease	(3) Exemption threshold	(4) Percentage of taxpaying estates
G2	-0.03	0.02	-16,812	-3.59
	(0.04)	(0.04)	(11,655)	(2.84)
G3	0.05	-0.04	18,337	-4.08
	(0.04)	(0.04)	(24,904)	(2.89)
G1xMiddle-wealth	-0.01	0.03	631	-1.35
	(0.06)	(0.06)	(26,562)	(3.73)
G2xMiddle-wealth	-0.06	0.01	14,521	3.78
	(0.05)	(0.06)	(32,325)	(3.74)
G3xMiddle-wealth	-0.04	-0.01	-39,900	5.23
	(0.06)	(0.06)	(34,230)	(3.78)
G1xHigh-wealth	0.05	0.02	523	-1.57
	(0.06)	(0.07)	(40,809)	(4.22)
G2xHigh-wealth	0.09	0.01	-4,373	4.75
	(0.06)	(0.07)	(38,901)	(4.08)
G3xHigh-wealth	-0.08	0.00	-52,137	8.94**
	(0.06)	(0.07)	(44,217)	(4.24)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0.28	0.46	95,669	34.9
Control mean	0.27	0.48	105,907	35.0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Ⅳ-13〉 상속세 적정 세율(정치 성향에 따른 이질성)

	Optimal estate tax rate					
	(1) 0.5 billion Won	(2) 1 billion Won	(3) 2 billion Won	(4) 5 billion Won	(5) 10 billion Won	(6) 20 billion Won
Progressive	0.5	1.2	2.0	4.9***	6.6***	5.8***
	(1.8)	(1.7)	(1.7)	(1.8)	(2.0)	(2.0)
Conservative	0.8	-1.0	-2.8*	-2.5	-3.5*	-3.7*
	(2.0)	(1.6)	(1.6)	(1.7)	(1.8)	(1.9)

〈표 Ⅳ-13〉의 계속

	Optimal estate tax rate					
	(1) 0.5 billion Won	(2) 1 billion Won	(3) 2 billion Won	(4) 5 billion Won	(5) 10 billion Won	(6) 20 billion Won
G1	0.1	−0.7	−0.4	2.0	1.7	2.5
	(1.4)	(1.2)	(1.3)	(1.4)	(1.5)	(1.6)
G2	0.4	0.3	0.2	1.7	1.5	1.7
	(1.4)	(1.3)	(1.4)	(1.4)	(1.5)	(1.6)
G3	−0.4	−1.2	−1.4	−0.8	−0.9	−0.8
	(1.4)	(1.3)	(1.3)	(1.4)	(1.5)	(1.5)
G1xProgressive	−0.1	1.2	−0.1	−2.5	−3.8	−2.8
	(2.4)	(2.2)	(2.3)	(2.5)	(2.7)	(2.8)
G2xProgressive	−0.6	0.8	1.1	−1.7	−3.3	−2.9
	(2.4)	(2.4)	(2.4)	(2.6)	(2.8)	(2.9)
G3xProgressive	−1.0	0.5	1.1	−0.0	−0.0	1.0
	(2.5)	(2.3)	(2.4)	(2.5)	(2.8)	(2.9)
G1xConservative	−1.5	1.7	3.2	0.0	1.6	1.2
	(2.4)	(2.1)	(2.2)	(2.4)	(2.6)	(2.8)
G2xConservative	2.3	0.9	1.3	−0.5	−0.0	−1.0
	(2.9)	(2.4)	(2.4)	(2.5)	(2.6)	(2.7)
G3xConservative	2.1	4.2*	6.4***	4.9**	6.4**	6.0**
	(2.6)	(2.2)	(2.3)	(2.4)	(2.6)	(2.7)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12.0	13.3	15.6	19.6	24.1	25.9
Control mean	11.7	13.0	15.2	18.7	23.4	24.9
Actual rate	0	5	10	20	30	35
Estimate of the actual	20.0	18.5	19.1	22.4	26.6	29.0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Ⅳ-14〉 상속세 적정 세율(자산 수준에 따른 이질성)

	Optimal estate tax rate					
	(1) 0.5 billion Won	(2) 1 billion Won	(3) 2 billion Won	(4) 5 billion Won	(5) 10 billion Won	(6) 20 billion Won
Middle-wealth	0.7	-0.0	-0.2	1.6	2.2	2.0
	(1.8)	(1.7)	(1.6)	(1.7)	(1.8)	(2.0)
High-wealth	-4.2**	-3.9**	-2.8	-1.4	-1.2	-1.0
	(2.0)	(1.8)	(1.8)	(1.9)	(2.1)	(2.2)
G1	1.7	1.1	1.4	2.4	2.5	3.8**
	(1.7)	(1.6)	(1.6)	(1.6)	(1.8)	(1.9)
G2	1.7	1.0	1.1	1.8	2.0	1.3
	(1.8)	(1.7)	(1.7)	(1.7)	(1.9)	(1.9)
G3	0.5	-0.1	0.4	1.4	1.5	1.1
	(1.7)	(1.7)	(1.7)	(1.7)	(1.9)	(1.9)
G1xMiddle-wealth	-4.1*	-2.4	-2.3	-2.2	-3.1	-3.2
	(2.3)	(2.1)	(2.1)	(2.3)	(2.4)	(2.6)
G2xMiddle-wealth	-3.7	-2.5	-2.1	-2.6	-4.3*	-3.3
	(2.4)	(2.2)	(2.2)	(2.4)	(2.5)	(2.6)
G3xMiddle-wealth	-1.1	0.0	0.7	-1.6	-1.1	-0.7
	(2.4)	(2.2)	(2.3)	(2.3)	(2.6)	(2.6)
G1xHigh-wealth	-1.1	-0.3	-0.1	0.0	0.3	-1.2
	(2.6)	(2.3)	(2.4)	(2.6)	(2.9)	(3.0)
G2xHigh-wealth	2.5	2.7	2.2	2.0	2.3	3.9
	(2.8)	(2.6)	(2.6)	(2.7)	(2.9)	(3.0)
G3xHigh-wealth	-0.4	0.5	-0.7	-1.1	-1.0	1.1
	(2.6)	(2.4)	(2.4)	(2.6)	(2.8)	(2.9)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12.0	13.3	15.6	19.6	24.1	25.9
Control mean	11.7	13.0	15.2	18.7	23.4	24.9
Actual rate	0	5	10	20	30	35
Estimate of the actual	20.0	18.5	19.1	22.4	26.6	29.0
Observations	2,798	2,798	2,798	2,798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강건성 검증

가. 이탈(attrition)

앞서 표본에 대한 설명에서 논의했듯이, 선택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응답자들을 초대할 때 구체적인 설문 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자나 상속세에 민감한 사람들이 실험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설문에 참여한 후 주제를 파악한 뒤에 관심이 없거나 어렵다고 느껴 중도에 이탈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을 끝까지 마치는 여부를 종속변수로,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을 시작한 이후 이탈한 응답자는 총 194명으로, 이는 최종 표본 2,798명 대비 7%에 해당한다. 이탈자 모두 성별, 연령, 학력, 고용 상태,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입력하였다. 이탈자가 있는 설명변수의 경우 누락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 인식의 가장 큰 예측 변수인 정치 성향에 따른 차별적인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득자는 설문을 완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자산가는 설문을 완료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고자산가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설문을 끝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표본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은 G1 집단은 대조군에 비해 중도 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실험 집단에서는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 그 원인을 명확히 추론하기 어렵다.

〈표 Ⅳ-15〉 이탈과 응답자 특징

	(1) Survey completion
Female	-0.01
	(0.01)
Age 30~49	-0.02
	(0.01)
Age 50~64	-0.02
	(0.01)
No college	-0.01
	(0.01)
Middle-income	-0.02
	(0.01)
High-income	-0.03**
	(0.01)
Middle-asset	0.02*
	(0.01)
High-asset	0.03***
	(0.01)
Progressive	0.01
	(0.01)
Conservative	0.00
	(0.01)
G1	-0.03**
	(0.01)
G2	0.00
	(0.01)
G3	-0.00
	(0.01)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0.94
Control mean	0.97
Observations	2,949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적정 세부담 측정 방법

사람들이 인식하는 적정 세부담의 구체적인 수준은 설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cCaffery and Baron(2006)에서는 응답자들이 적정 소득세 수준을 금액으로 대답할 때보다 백분율로 대답할 때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과세대상 금액이 클수록 더 뚜렷했다. 즉, 적정 세금을 금액으로 물을 경우 사람들이 선호하는 세율 구조는 덜 누진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응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절반에게는 적정 세부담을 금액으로 묻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백분율로 물었다. 정보 제공 내용에 따른 총 8개 집단(상속세 효과 정보 제공에 따라 4개 × 실제 세부담 정보 제공에 따라 2개)을 각각 무작위로 나누어 응답 방식에 따라 적정 세부담의 평가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 가지 방식으로 물을 때 다른 방식에 따른 세부담도 함께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적정 세부담은 백분율로 물을 때 더 누진적인 형태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5억원의 유산에 대한 적정 세부담은 금액으로 물을 때보다 백분율로 물을 때 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반면, 50억원, 100억원, 200억원의 경우 백분율로 물을 때 각각 1.9%포인트, 3.1%포인트, 5.4%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적정 소득세를 분석한 McCaffery and Baron(2006)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다. 설문시간 및 응답자 피로

설문조사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응답자 피로(fatigu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응답자는 집중력을 잃고 무성의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데이터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완료 시간 중앙값은 13분으로, 이는 미국에서 유사한 주제로 설문 실험을 수행한 Stantcheva(2021)의 35분에 비해 짧다. Stantcheva(2021)는 여러 설문조사에서 평균적으로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문 피로로 인한 응답 신뢰성 저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 시간이 상위 5%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정 세부담에 대한 분석을 다시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 실험자 수요 효과(Experimenter demand effects)

실험자 수요 효과(experimenter demand effects)는 피험자가 실험자의 기대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응답하는 경향을 말한다(de Quidt et al. 2018). 피험자는 실험자의 의도를 추측하고, 실험자가 원하는 결과에 맞추어 응답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험자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단서, 그리고 다른 피험자들로 인한 사회적 압박(social pressure)에서 대면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에서는 응답자에게 오늘 수행한 설문조사가 진보적인 성향(상속세 강화 등)이나 보수적인 성향(상속세 완화 등)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설문조사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설문이 중립적이었다고 답변했으며, 진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 보수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였다.

설문이 진보적 또는 보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인식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 및 연령대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와 30대 이상 응답자는 설문 내용을 보수적으로 더 편향되고 진보적으로 덜 편향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동일한 설문 내용을 진보적으로 더 편향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재분배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은 응답자들은 설문이 더 진보적이고 덜 보수적인 성향을 띤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Ⅳ-16〉 설문 편향 인식의 요인

	(1) Left-wing biased	(2) Right-wing biased
Female	0.01	-0.02
	(0.02)	(0.01)
Age 30~49	-0.06**	0.09***
	(0.03)	(0.02)
Age 50~64	-0.07**	0.11***
	(0.03)	(0.03)
Middle-income	-0.02	0.01
	(0.02)	(0.02)
High-income	-0.02	0.02
	(0.03)	(0.03)
Middle-wealth	0.02	-0.01
	(0.02)	(0.02)
High-wealth	0.02	-0.00
	(0.03)	(0.02)
No college	0.02	0.02
	(0.03)	(0.02)
Progressive	-0.05**	0.10***
	(0.02)	(0.02)
Conservative	0.07***	0.00
	(0.02)	(0.02)
G1	0.03	-0.03
	(0.03)	(0.02)
G2	0.00	0.01
	(0.02)	(0.02)
G3	0.02	-0.03
	(0.03)	(0.02)
Descriptive statistics		
Overall mean	0.34	0.18
Control mean	0.32	0.19
Observations	2,798	2,798

주: *** p<0.01, ** p<0.05, * p<0.1,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Ⅴ. 결론

최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주요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재분배 수단인 소득세와 상속세는 각각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두 세제는 모두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다.[47] 최근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은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세의 경우 2010년 이후 최고세율이 35%에서 45%로 인상되었고, 상속세는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자산의 명목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세대상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48]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세제에 대한 견해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설문실험을 이용해 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선호와 세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가 수준 자료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와 저소득층 지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국가일수록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소득격차 개선에 있어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더 누진적인 소득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응답이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상

47) 현재 소득세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6%에서 시작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45%에 이른다. 상속세의 경우 1억원 이하일 때 10%에서 시작해 30억원을 초과할 때 50%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48)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2년 4.5%로 증가

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응답자가 인식한 적정 세율이 실제 실효세율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서 응답자가 인식한 적정 세율이 실제 실효세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장에서는 상속세에 초점을 맞춘 자체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적정 세부담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와 비교하여,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세제에 대한 지식,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 해외 선행연구에서 응답자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Stantcheva, 2021). 적정 세부담에 대한 선호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부담 변화 여부, 적정 면세점 수준 및 과세대상 비율 등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설문실험을 통해 상속세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실제 세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요인이 응답자의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 실효세율을 유산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는 과대 추정하고,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실제 세부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선호가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작위 실험을 통해 세부담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응답자들의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적정 상속세 체계는 실제 세제에 비해 덜 누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응답자들에 비해 상속세를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tcheva, 2021).[49]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적조세모형에 따르면, 적정 과세 수준은 단순히 사회적 선호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세제로 인한 행태 변화와 능력 분포의 형태 등

49) 미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활용한 Stantcheva(2021)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Piketty and Saez, 2013). 또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견해가 조세 제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소수의 납세자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선호의 의의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50]

상속·증여세 등 세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첨예한 분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세제에 대한 지식, 효율 비용과 재분배 효과, 공정성 인식, 적정 세부담 선호 등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5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1년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0%(전체 피상속인 중 평균 0.26%)가 전체 상속세의 75%를 납부하였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권성준 · 김정환,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김진수 · 김정아 · 조진권, 『주요국의 세법령 개정절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신상화,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오종현,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

_____, 「인구주택총조사」,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 2022.

_____, 「재정패널조사 16차년도 자료」, 202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 8.

〈외국 문헌〉

Alesina, A., Miano, A., and Stantcheva, S., "The polarization of reality," *AEA Papers and Proceedings*, 110, 2020, pp. 324~328.

Almås, I., Cappelen, A.W., and Tungodden, B., "Cutthroat capitalism versus cuddly socialism: Are Americans more meritocratic and

efficiency-seeking than Scandinavia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5), 2020, pp. 1753~1788.

Bastani, S., and Waldenström, D., "Perceptions of inherited wealth and the support for inheritance taxation," *Economica*, 88(350), 2021, pp. 532~569.

Bellani, L., Berriochoa, K., Kapteina, M., and Schwerdt, G., "Information provision and support for inheritance taxation: Evidence from a representative survey experiment in Germany," 2024.

Bénabou, R., and Tirole, J., "Incentives and prosocial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2006, pp. 1652~1678.

De Quidt, J., Haushofer, J., and Roth, C., "Measuring and bounding experimenter demand," *American Economic Review*, 108(11), 2018, pp. 3266~3302.

Farhi, E., and Werning, I., "Estate taxation with altruism heterogene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2013, pp. 489~495.

Fisman, R., Gladstone, K., Kuziemko, I., and Naidu, S., "Do Americans want to tax wealth? Evidence from online survey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8, 2020.

Kleven, H. J., "How can Scandinavians tax so muc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4), 2014, pp. 77~98.

Kuziemko, I., Norton, M. I., Saez, E., and Stantcheva, S., "How elastic are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randomized survey experi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105(4), 2015, pp. 1478~1508.

McCaffery, E. J., and Baron, J., "Thinking about tax,"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06, 12(1), pp. 106~135.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2021.

OECD.Stat, "Taxing Wages, country and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검색일자: 2024. 10. 14.

Persson, T., and Tabellini, G., "Political economics and public finance,"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3, 2002, pp. 1549~1659.

Piketty, T., and Saez, E., "A theory of optimal inheritance taxation," *Econometrica*, 81(5), 2013, pp. 1851~1886.

Saez, E., and Stancheva, S., "Generalized social marginal welfare weights for optimal tax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106(1), 2016, pp. 24~45.

Singhal, M., "Quantifying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2021.

Stantcheva, S., "Understanding tax policy: How do people reas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6(4), 2021, pp. 2309~2369.

World Values Survey(WVS), 제5차 ~ 제7차 자료.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권성오

본 연구는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분석한다. 자체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 실효세율을 유산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는 과대 추정하고,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실제 세부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선호가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작위 실험을 통해 세부담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응답자들의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적정 상속세 체계는 실제 세제에 비해 덜 누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axpayer Perceptions and Preferences: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in Korea

Sungoh Kwon

This study investigates public perceptions and preferences regarding tax systems, with a focus on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these preferences. To explore perceptions of inheritance taxation, a self-administered survey and experimental approach were employ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respondents overestimates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subject to the tax. Furthermore, effective inheritance tax rates were overestimated for smaller estates and underestimated for larger ones, highlighting significant mispercep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surveys do not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bout actual tax burdens, respondents' preferences may be inaccurately measured due to misinformed perceptions. A randomized experiment providing detailed tax burden information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respondents' perceptions of optimal tax levels. Notably, the inheritance tax system preferred by respondents appeared less progressive compared to the existing tax framework. However,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tax system preferred by the majority may not necessarily align with what is socially optimal.

저자약력

권성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나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김상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배현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4-07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발 행	2024년 12월 31일
저 자	권성오
발 행 인	이 영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044)414-2114(代)
홈 페 이 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 가	14,000원
조판 및 인쇄	일지사
I S B N	979-11-6655-316-5 93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값 14000 원
93320
9 791166 553165
ISBN 979-11-6655-316-5